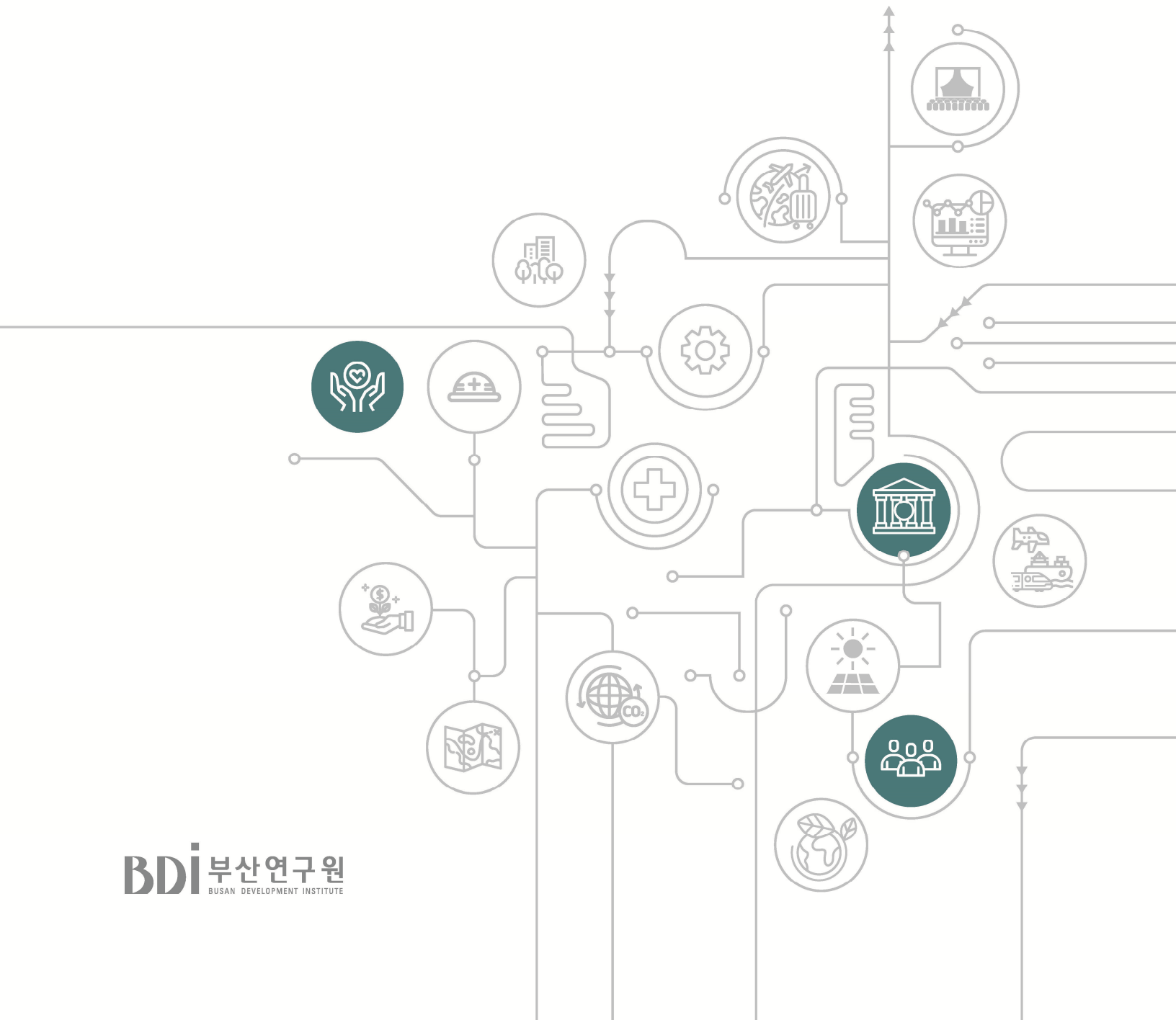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Busan's Youth Policy Evaluation Index

김세현·손헌일·장지현·김민경·서옥순·이가현





김 세 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손 헌 일 문화·복지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장 지 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김 민 경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서 옥 순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이 가 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원

※ 겹장에 강조해 표시한 아이콘은 해당 연구 주제를 알기 쉽게 표현한 그림 기호로 아래에 기술한 주제별 키워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합니다.

	행정 및 제도: 법·제도, 조직, 지역분권, 행정통합, 주민자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행·재정 등		사회 및 복지: 인구,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노동, 가구, 공동체, 불평등, 저출생(산), 교육 등
	삶의 질: 행복, 교육, 학습, 인권, 가정, 보험, 연금, 취약계층, 공정과 정의, 평화, 연대, 성평등, 생활 등		



요 약

◆ 연구목적

2017년 5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수립된 “부산광역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산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담당 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확장·강화시키면서 지역 청년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책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광역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주요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청년정책의 효과성 재고를 위한 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①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바탕으로 ②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방안을 구성하고, 구성된 안을 토대로 일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주요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과 그 목적물의 가치, 장점, 효과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과정을 평가(evaluation)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부가 실시한 특정 정책 및 사업 등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과정, 혹은 과정적 개념으로 정의가 가능하다(정주택 외, 2007; 김종호, 2016).

대부분의 경우 정책의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결과 및 효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정책의 결과에 대해 분석 및 점검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다시 말해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 행위이며, 공공 조직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계획 또는 정책을 실행·집행하여, 그 후의 결과 및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체계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 전문성과 중립성을 충족하는 평가단 구성이다.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단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 평가자의 성향과 무능력은 결국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의견이나 제안, 부적절한 평가지표 설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송희준 외, 2005). 둘째,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평가 과정을 비롯하여 추후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 교환은 평가결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평가 과정에서 평가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담당자들 역시 평가 결과에 대해 더욱 신뢰하고 결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락·강근복, 2009). 셋째, 거시적인 평가 결과 활용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성과-보상 차원의 활용에서 나아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정책 전략 설정 및 추진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종호, 2016).

◆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청년정책은 정책대상의 기준이 특정연령대에 해당하는 전체라는 점에서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되는 다양한 정책들의 이질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 청년 연령대가 조레에 따라 늘어나면서 정책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일례로,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함과 함께, 이에 따른 청년정책 평가의 근거 역시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2024년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평가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평가는 크게 종합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되는데, 종합평가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 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광역 시도에 대한 기관평가를 의미한다. 한편 심층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심층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평가구분		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시기
종합평가 (기관평가)	중앙 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청년정책 평가로 전환	'23년도 실적	'23년 11~12월
	시·도	대표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 추진역량에 대한 종합평가	'23년도 실적	'24년 3~5월
심층평가 (과제평가)	중앙 행정기관	청년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3년도 실적	'24년 3~6월

자료: 국무조정실(2023)

〈그림 1〉 2024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체계

한편, 서울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초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출범시켜 운영하면서, 지역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 허브로서의 역할 외에도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시에서 수행된 청년정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진행된 청년정책 평가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평가 지표에 관한 문제이다.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특성을 볼 때, 모든 정책들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평가의 경우에는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평가지표 마련 및 체계를 수립하였다(배정희·김기현, 2020).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지표 수립에 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의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예산 집행률과 개별 사업이 설정한 목표성과의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자체평가에서 외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청년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부산시 청년산학국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의 외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외부평가의 형태로 정책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이후 평가 환류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는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 이후에 결과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 이후, 이를 다시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환류체계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크게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와 정책평가 관련 전문가, 그리고 부산시 청년정책조정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안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사업영역 평가’와 ‘청년정책 사업평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사업영역평가는 해당 청년정책 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청년 생활인구’의 분야와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 사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경우 ‘자료의 충실성’과 ‘계획수립 및 이행’,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 ‘개선 필요성’의 5개 정량지표와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평가는 청년정책으로 해당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효율성’, ‘지속 필요성’의 4개 정량지표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 할 수 있는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의 한계 및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바탕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시범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은 2023년 부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 청년정책 사업들 중 부산시 청년산학국에서 선정한 8개 자체사업이다. 정책평가에는 28명의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였다. 청년정책 전문가는 주요 영역별 학계 전문가와 및 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청년 당사자의 경우 정책영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 이외에도 청년활동과 관련이 낮은 일반 청년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이번 청년정책평가는 평가를 위한 사업담당자의 평가서 없이 사업 결과보고서만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보다 엄밀한 청년정책 평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사업담당자의 보고서 제출 및 관련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지표 안을 바탕으로 부산시에서 청년정책 평가를 진행할 경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상에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평가에서는 청년산학국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청년정책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책 평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의 목표 및 비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평가의 목적 및 활용방안 역시 사회적 수요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중앙단위의 청년정책 평가 역시 지난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역시 추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 수행 및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보완이 중요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3. 연구내용	3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	5
	1.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1) 정책평가의 개념	5
	2) 정책 평가의 방법	8
	3) 정책 평가의 기준	11
	4) 시민참여 정책평가	11
	2. 주요 정책평가 사례	13
	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13
	2) 인구정책 평가	15
	3) 사회복지정책 평가	24
	4) 아동정책 평가	28
제3장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33
	1. 청년정책 평가의 주요 원칙	33
	2. 청년정책 평가체계 사례분석	35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	35
	2)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청년정책 평가	44
	3. 부산시 청년정책 및 평가체계	47
	1)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현황	47
	2)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및 평가체계	49
	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 진단	51

제4장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53
	1.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도출 과정	53
	1) 전문가 자문 개요	53
	2) 참여 전문가	54
	3) 전문가 자문 결과	55
	2.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65
 제5장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69
	1.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개요	69
	1) 평가 대상	69
	2) 평가 방법	77
	2.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80
	1) 평가결과 기초분석	80
	2) 정책 사업 별 평가 결과	82
	3) 지표별 평가결과 종합	104
	3. 시범평가 심층분석	107
	1) 청년 당사자와 비청년 집단 비교	107
	2) 전문가와 일반인 비교	108
	3) 부산지역 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 비교	108
 제6장	 결론	 111
	1. 연구결과 요약	111
	1) 정책평가의 특성	111
	2) 주요 정책평가 사례분석	112
	3)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분석	112
	4)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도출	114
	5)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115

2. 정책제언	116
1) 청년정책 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화	116
2) 청년정책 심층평가 도입	117
3)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117
4)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평가	118
Abstract	119
참고문헌	121

표 목차

〈표 1-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1
〈표 1-2〉 전문가 자문 개요	3
〈표 2-1〉 정책평가의 분류	8
〈표 2-2〉 평가설계접근법 비교	10
〈표 2-3〉 주요 학자별 정책평가 기준	11
〈표 2-4〉 공공정책에 있어 시민의 역할 및 참여 강화 방안	12
〈표 2-5〉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14
〈표 2-6〉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주요 업무	16
〈표 2-7〉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8
〈표 2-8〉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정책 실무자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 지표	21
〈표 2-9〉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구성	24
〈표 2-10〉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지표 구성	25
〈표 2-11〉 5기 사회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 품질평가 지표 구성	27
〈표 2-12〉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기타 자체평가 구성	31
〈표 2-13〉 아동정책영향평가 흐름	31
〈표 3-1〉 시기별 청년정책 종합평가(중앙행정기관) 평가 비교	37
〈표 3-2〉 시기별 청년정책 종합평가(광역 시·도) 평가 비교	37
〈표 3-3〉 광역 시·도 평가를 위한 청년정책 7대 분야	38
〈표 3-4〉 2024년 광역 시·도 종합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	39
〈표 3-5〉 시기별 청년정책 중앙부처 심층평가 평가 비교	41
〈표 3-6〉 2023년 청년정책 현안 과제 그룹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42
〈표 3-7〉 청년정책 심층평가 분석 틀	42
〈표 3-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역할	44
〈표 3-9〉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주요 내용	49
〈표 4-1〉 전문가 자문 개요	54
〈표 4-2〉 자문참여 전문가	55
〈표 4-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1차 자문결과	56
〈표 4-4〉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2차 자문결과	59
〈표 4-5〉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3차 자문결과	63
〈표 4-6〉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 (최종 안 기준)	67
〈표 5-1〉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대상사업 목록	69
〈표 5-2〉 2023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72
〈표 5-3〉 NEXT 10 사업 역량개발 사업 지원내용 및 성과	75
〈표 5-4〉 2023년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 주요 실적	77

〈표 5-5〉 부산 청년정책 평가단 구성	78
〈표 5-6〉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사업별 평가)	80
〈표 5-7〉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영역별 평가)	81
〈표 5-8〉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평가 결과	83
〈표 5-9〉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83
〈표 5-10〉 청년문화 축제 개최 종합평가 결과	84
〈표 5-11〉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 종합의견	84
〈표 5-12〉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평가 결과	85
〈표 5-13〉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86
〈표 5-14〉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종합평가 결과	86
〈표 5-15〉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종합의견	87
〈표 5-16〉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평가 결과	88
〈표 5-17〉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89
〈표 5-18〉 부산청년주간 운영 종합평가 결과	89
〈표 5-19〉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 종합의견	90
〈표 5-20〉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평가 결과	91
〈표 5-21〉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92
〈표 5-22〉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종합평가 결과	92
〈표 5-23〉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 종합의견	93
〈표 5-24〉 NEXT 10 운영 사업평가 결과	94
〈표 5-25〉 NEXT 10 운영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95
〈표 5-26〉 NEXT 10 운영 사업 종합평가 결과	95
〈표 5-27〉 NEXT 10 운영 사업 종합의견	96
〈표 5-28〉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평가 결과	97
〈표 5-29〉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98
〈표 5-30〉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종합평가 결과	98
〈표 5-31〉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종합의견	99
〈표 5-32〉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평가 결과	100
〈표 5-33〉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100
〈표 5-34〉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종합평가 결과	101
〈표 5-35〉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종합의견	101
〈표 5-36〉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평가 결과	103
〈표 5-37〉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103
〈표 5-38〉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종합평가 결과	104

〈표 5-39〉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 종합의견	104
〈표 5-40〉 정책영역 분류결과 종합	105
〈표 5-41〉 세부 지표별 사업평가 결과	105
〈표 5-42〉 세부 지표별 종합평가 결과	106
〈표 5-43〉 청년 및 비청년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107
〈표 5-44〉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108
〈표 5-45〉 부산지역 거주자 및 타지역 거주자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10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절차	4
〈그림 2-1〉 정책평가의 체계	6
〈그림 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운영 체계	15
〈그림 2-3〉 2024년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 주요 업무	19
〈그림 2-4〉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흐름도	20
〈그림 2-5〉 2023년 인구영향평가 시민선호도조사 결과	23
〈그림 2-6〉 사회서비스 품질지표 평가체계	26
〈그림 2-7〉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체계	29
〈그림 3-1〉 2024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체계	35
〈그림 3-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45
〈그림 3-3〉 2023년 서울시 청년정책사업 연차보고서	46
〈그림 3-4〉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47
〈그림 3-5〉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48
〈그림 3-6〉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의 성과분석 지표	50
〈그림 3-7〉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심의	51
〈그림 4-1〉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초안	58
〈그림 4-2〉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수정안	61
〈그림 4-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최종안	66
〈그림 5-1〉 2023년 부산 댄스 페스티벌	70
〈그림 5-2〉 2023 부산 청년주간 주요 프로그램	71
〈그림 5-3〉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 실적(2023, 2024년)	73
〈그림 5-4〉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74
〈그림 5-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운영 체계	76
〈그림 5-6〉 부산 청년정책 평가단 특성	79
〈그림 5-7〉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82
〈그림 5-8〉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85
〈그림 5-9〉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88
〈그림 5-10〉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1
〈그림 5-11〉 NEXT 10 운영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4
〈그림 5-12〉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7
〈그림 5-13〉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9
〈그림 5-14〉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102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17년 5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수립된 “부산광역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산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담당 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확장·강화 시키면서 지역 청년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표 1-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구분	시기	내용
조직	2017년	• 청년정책팀 신설
	2018년	•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및 조직개편
	2019년	• 청년희망정책과 조직개편
	2021년	• 청년산학창업국 신설
	2022년	• 청년산학국으로 조직개편
정책 거버넌스	2017년	•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018년	• 부산시 1기 청년위원회 출범 및 운영
	2019년	• 부산청년정책 네트워크 출범 및 운영
	2020년	• 부산시 2기 청년위원회 구성
	2021년	• 부산시 청년위원회의 명칭 변경(청년위원회→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부산청년센터 개소
	2022년	• 부산시 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자료: 민희 외 (2023)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지역 청년정책의 양적성장이 확인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실효성 재고 및 체계적 관리, 정책 재구조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 역시 제시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98개 사업으로 총 3,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부산시 예산 비율은 36.3%(1,132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청년정책이 부산시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등장한 이후 매년 사업의 수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발표된 “부산광역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정책의 질적 전환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정책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성과측정에 대한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책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광역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주요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청년정책의 효과성 재고를 위한 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①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바탕으로 ②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방안을 구성하고, 구성된 안을 토대로 일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주요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공간을 기준으로 볼 때, 연구의 범위는 부산광역시로 한정된다. 다만, 내용적으로 정책 평가 및 청년정책평가 사례연구에서는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정책평가 제도 및 사례를 포괄한다. 이번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경우 청년정책 시범평가는 2023년 추진된 부산시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체계의 추진 시점은 202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문헌연구이다. 정책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위해 일반적 정책평가와 관련한 학술서적 및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문헌을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평가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주요 정책평가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공개되어있지 않은 정책평가결과 보고서의 경우 개별 접촉을 통해 주요 평가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 내부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가 자문이다. 1차 자문에서는 기존에 청년정책 평가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정책평가 전문가 및 기관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평가체계의 특성 및 방향성,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2차 및 3차 자문에서는 앞선 자문을 통해 도출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방향성, 수정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의 후반부에 진행된 청년정책평가에서는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청년정책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1-2〉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시기	내용
1차 자문	2024.02.26. - 27.	- 지역 및 중앙의 청년정책 평가 사례 조사 - 청년정책사업 평가 대상 및 지표 구성 조사
2차 자문	2026.07.25	-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수정 필요 사항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3차 자문	2026.08.07. - 16.	-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수정 필요 사항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년정책평가	2026.08.28. - 09.06.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진행 (8개 사업)

3. 연구내용

이번 연구는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선행 학술연구 및 연구보고서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 및 정책평가 방법, 주요 정책평가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역에서의

청년정책 평가 사례연구와 더불어,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앞선 사례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성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의 내용 및 특성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중심으로 8개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1-1>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	-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주요 정책평가 사례 분석	>>> - 선행연구 조사 -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제3장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 청년정책 평가의 주요 원칙 - 청년정책 평가체계 사례분석 - 부산시 청년정책 및 평가체계	>>> -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제4장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도출 과정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 전문가 자문회의
제5장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개요 -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및 심층분석	>>> - 전문가 정책 평가 - 평가결과 통계분석
제6장 결론	- 연구결과 요약 -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절차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

1.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평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과 그 목적물의 가치, 장점, 효과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과정을 평가(evaluation)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부가 실시한 특정 정책 및 사업 등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과정, 혹은 과정적 개념으로 정의가 가능하다(정주택 외, 2007; 김종호, 2016).

대부분의 경우 정책의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결과 및 효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정책의 결과에 대해 분석 및 점검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다시 말해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 행위이며, 공공 조직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계획 또는 정책을 실행·집행하여, 그 후의 결과 및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체계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준비, 채택, 실행 및 적용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평가 및 수정이 요구된다. 다음의 <그림 2-1>은 EU가 요구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요소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초기 준비단계 및 적용 과정에서는 개별 정책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정책의 실행 및 적용 단계에서는 정책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진행된다. EU는 공공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 EC (2021)

〈그림 2-1〉 정책평가의 체계

정책 평가의 수행과 함께 결과의 활용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활용(evaluation utilization)이란 평가 과정 전반에서 획득된 정보나 제언과 같은 결과물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업 등의 개발과 집행에 활용하는 행동을 뜻한다(Leviton& Hughes, 1981; 노유진, 2005 재인용). 이 같은 정책 평가의 활용은 협의와 광의의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먼저 협의의 정의에서는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추천안, 제안, 건의 등의 내용을 정책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환경 및 교통 영향평거나, BSC(balanced score card) 형식의 내부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협의의 측면에서 정책 평가는 각 정책사업의 장·단기적 효과성을 확인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김종호, 2016).

한편 평가의 활용을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평가의 결과물을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외에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정책 참여자에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책의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효과성(effectiveness) 이외에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효율성(efficiency)의 측면도 고려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 전문성과 중립성을 충족하는 평가단 구성이다.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단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 평가자의 성향과 무능력은 결국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의견이나 제안, 부적절한 평가지표 설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송희준 외, 2005).

둘째,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평가 과정을 비롯하여 추후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 교환은 평가결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평가 과정에서 평가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담당자들 역시 평가 결과에 대해 더욱 신뢰하고 결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락·강근복, 2009).

셋째, 거시적인 평가 결과 활용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성과-보상 차원의 활용에서 나아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정책 전략 설정 및 추진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종호, 2016).

이 같은 정책평가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분은 평가자, 평가목적, 평가대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평가자 중심의 유형 구분은 정책 사업을 추진·담당하는 기관에서 자체·자율적으로 각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로,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경우 외부평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노화준, 2018; 이윤식, 2018; 배정희·김기현, 2020).

평가목적에 따른 구분의 경우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를 통해 집행상태의 결과를 평가하는 형성평가와 정책 종료 이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총괄평가로 구분된다(김지원, 2019; 배정희·김기현, 2020).

마지막으로 평가대상에 따라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로 구분이 가능하다. 과정평가란 정책의 집행 과정이 계획과 절차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영향평가란 정책집행을 통해 각 정책이 목표로 하는 효과를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지원, 2019; 배정희·김기현, 2020).

〈표 2-1〉 정책평가의 분류

분류기준	정책평가 유형	평가 개념
평가자	자체평가	•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자체적, 자율적으로 평가
	외부평가	•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의 외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가
평가목적	형성평가	• 정책 집행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책 집행상태의 결과를 평가
	총괄평가	• 정책의 계속적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정책집행 종료 후 그 결과를 확인 및 검토하는 평가
평가대상	과정평가	• 정책이 수립된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 및 검토하는 평가
	영향평가	• 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 및 검토하는 평가

자료: 김지원(2019); 배정희·김기현(2020)에서 재인용

이 같은 정책평가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책무성 확보이다. 정책 집행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정책정보의 환류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도출된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 추진 과정의 주요 행위자에게 환류되어 차후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셋째, 지식의 축적이다. 정책평가의 과정은 정책 수단이라는 독립변수와 정책 목표라는 종속변수 간의 가설을 확인하는 인과성 검증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를 통해 특정 정책수단이 정책 목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학술적·정책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남궁근, 2019).

2) 정책 평가의 방법

정책평가의 방법은 분석 자료의 유형에 따라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구분하거나, 평가설계의 유무에 따라 실험설계 접근법과 비실험설계 접근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이윤식, 2006).

먼저 양적평가 방법이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실험적인 방법이나 비참여 관찰, 표준화된 면접 수행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질적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이나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진행한다(김주환, 2003). 한편 실험설계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또는 통제)집단의 무작위 선발 및 배정과 정책간여의 조작 여부에 따라 진실험 설계접근법, 준실험 설계접근법, 수정평가 설계접근법, 전실험 설계접근법 등으로 나뉜다. 진실험 설계접근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 선발 및 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간여의 조작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준실험 설계접근법은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준실험평가 설계접근법의 한 유형인 수정평가 설계접근법은 특히 통제집단의 무작위 선발 및 배정을 통해 진실험 평가설계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전실험 설계접근법의 경우 평가실험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실험 설계접근법은 평가실험적 성격을 전혀 지니지 않은 평가설계접근법을 뜻한다(이윤식, 2006; Mohr, 1995).

정책과 정책 결과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실험 설계접근법과 비실험 설계접근법의 주요 차이점은 평가 이론 및 평가 설계 모형의 사용 여부이다. 실험 설계접근법은 평가 이론이나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를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반면, 비실험 설계접근법은 평가 이론이나 모형에 기반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 기법의 활용에서도 두 접근법은 차이를 보이는데, 실험설계접근법은 주로 양적 분석을 사용하고, 비실험 설계접근법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양적 분석은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적 분석 과정을 통해 사실 지향적인 과학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질적 분석은 정책 대상자의 요구와 정책의 본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가치 지향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

실험설계접근법과 비실험 설계접근법 간에는 타당성 위협 요인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른 타당성의 차이도 나타난다. 진실험 설계접근법은 내적 타당성이 높고, 준실험 설계접근법은 외적 타당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실험 설계접근법은 앞의 접근법들에 비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이윤식, 2006).

이 같은 특징들도 불구하고 정책 평가의 현실적용 과정을 고려할 때 진실험 설계접근법은 정책 개입 조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한계가

큰 반면, 나머지 평가 설계 접근법들은 실제 평가 과정에서 보다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물론 정책 평가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평가 설계 접근법들을 평가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이윤식, 2000). 다음 제시되는 <표 2-2>는 지금까지 논의한 평가설계 접근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 평가설계접근법 비교

구분	실험설계접근법		비실험설계/ 전실험설계 접근법
	진실험 설계접근법	준실험 설계접근법	
평가이론	전제	전제	무관
사업모형	전제	전제	무관
평가대상	한정	한정	광범위/한정
평가기법	양적 분석 위주 질적 분석 가능	양적 분석 위주 질적 분석 가능	질적 분석 위주 양적 분석 가능
타당성 위험요인	내적타당성 높음 외적타당성 보통/낮음	내적타당성 보통 외적 타당성 높음	내적타당성 낮음 외적타당성 보통/낮음
정책평가시 적용한계	정책간여 조작 배제가 불 가능하여 실제 적용상 한계	실제 적용 가능	실제 적용 가능
종합	현실적 적용 제약 극복 후 활용 가능	현실적 활용가치 우수	실험설계접근법과의 병행이 필요

자료: 이윤식(2006)

한편, 최근 공공영역에서는 논리모형(logic model)을 활용한 평가 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논리모형이란 확인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도해이다(Bickman, 1987). 다시 말해 논리모형은 정책수행에 있어 투입과 활동, 산출 성과 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주요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논리모형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의 투입과 산출,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과가 논리적인 관계에 의해 포함되게 된다(최영출, 2011). 이 같은 논리모형을 활용한 평가는 연속성 있는 도표를 통해 주요 요서간의 관계 및 정보의 흐름을 요약해주며, 이를 통해 그 활동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논리모형을 통한 분석 방법의 경우 정책의 목표나 비전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3)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자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책의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과 적절성(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형평성(정책의 공정성과 평등성)은 모든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관심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형평성과 대응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평가는 단일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2-3>은 주요 학자들이 제시하는 정책평가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 주요 학자별 정책평가 기준

구분	평가 기준
서치만 (E. A. Suchman, 1967)	• 노력(effort) • 성과(performance) • 적절성(adequacy) • 효율성(efficiency) • 과정(process)
던 (W. N. Dunn, 2015)	• 효과성(effectiveness) • 능률성(efficiency) • 적절성(adequacy) • 형평성(equity) • 대응성(responsiveness) • 적합성(appropriateness)
나카무라와 스몰우드 (Nakamura & Smallwood, 1980)	• 능률성(efficiency) • 형평성(equity) • 재분배(redistribution) • 적절성(adequacy) • 적합성(appropriateness) • 대응성(responsiveness) • 체제유지(system maintenance)
길버트와 스펙트 (Gilbert & Specht, 1974)	• 효과성(effectiveness) • 효율성(efficiency) • 적절성(adequacy) • 형평성(equity)

4) 시민참여 정책평가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집행하는 정책과 정책의 결과물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국민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4〉 공공정책에 있어 시민의 역할 및 참여 강화 방안

주요 역할	참여 강화 방안
이해관계자로서의 시민	•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로 조직화하는 것을 도와야 함 • 시민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지원해야 함
지지자로서의 시민	• 시민들이 기술적·정치적인 도움을 받아 그들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시민들이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돕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의제설정자로서의 시민	• 시민들이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담론의 장과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함 • 시민들이 초기 아젠다 세팅에서부터 문제의 정의, 해결책의 발견에 이르기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시민들이 지역사회중심의 해결책을 낼 수 있고 영역을 가로지르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평가자로서의 시민	• 시민들의 평가가 엄격하고 신뢰 할 만하며 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 •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슈들에 대하여 성과 보고를 해야 함
협업자로서의 시민	• 시민들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 이해관심사가 존중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함 • 시민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타인들을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자산(시민들을 포함)을 찾아내게 돕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공동생산 프로젝트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자료: Epstein et al.(2005); 이석환 (2018)에서 재인용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시민의 역할이 정책 서비스의 고객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 즉 공공 정책에서 시민을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체계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pstein과 그의 동료들은 시민의 5가지 유형을 〈표 2-4〉과 같이 구분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다섯 가지 시민의 역할을 강화·지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pstein et al., 2005; 이석환, 2018에서 재인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정책 형성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정책 형성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 결정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가치관이 조정되어 정책의 적실성 제고와 더불어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 추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사전 조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갈등의 감소 및 주요 이해당사자의 정책 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정책 대상집단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책 집행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근주, 2018).

정책 평가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 계획 단계에서 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평가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정책을 평가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정책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평가 결과의 가치 및 수용도, 정책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2. 주요 정책평가 사례

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 추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평가센터 위탁형’ 체계이다. 이 같은 방식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나 정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을 분석 및 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정책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가센터의 설립은 법령이나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연구 위탁형’ 평가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시행계획의 평가나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직접 평가형’이다. 사실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체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각 부처의 업무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부처가 직접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 역시 존재한다.

마지막 유형은 ‘산하기관 활용형’ 평가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평가센터 위탁형 방식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평가의 진행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기관의 고유사업 운영된다는 점에서 앞선 평가 센터 위탁형과는 구분이 가능하다.

이 같이 다양한 형태의 평가체계는 각 유형별로 서로 다른 특성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유형별 평가체계 틀을 바탕으로 정책평가의 주요 사례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표 2-5〉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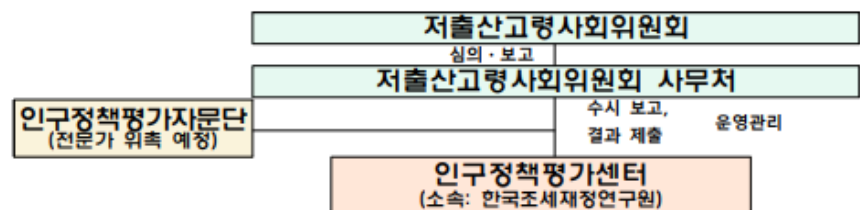
구분	특징	주요 사례
평가센터 위탁형	- 정책사업의 분석·평가 업무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타 기관에 위탁 - 법령이나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연구 위탁형	정책사업 추진부처에서 평가(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평가
직접 평가형	- 정책사업 추진부처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 -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한 뒤 이에 따라 자체적 평가를 진행 - 전문성을 요하는 평가의 경우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기도 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영향평가
산하기관 활용형	- 정책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의 세부 업무 중 하나로 정책 평가를 진행 - 평가센터 위탁형과 유사하나 투입 예산이 각 산하기관의 고유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	사회서비스 품질지표 평가, 서울시 광역청년센터 사업평가

2) 인구정책 평가

지난 15년 동안 총 세 차례 수립·추진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었으나 우리사회는 출산율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위기의 심화 속에서 중앙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의 인구정책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 중 부산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 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가 예산집행 및 성과지표달성 중심의 평가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신설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2024년 4월에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

〈그림 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운영 체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는 현 인구정책 평가체계가 인구정책 관점의 성과지표가 미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과정에서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단기적인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구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화된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층평가 도입과 함께, 평가 결과에 기반 한 환류체계 강화를 주요한 정책평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 2-6>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주요 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인구정책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핵심 사업을 대상으로 한 심화평가를 진행하고, 이 중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표 2-6〉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주요 업무

구분	내용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성과(outcome) 중심으로 개편 -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심층평가	- 대상 사업 발굴 및 중장기 심층평가 수행 -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수행 -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장기전망 및 대응 전략 수립	- 미래 사회·경제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개입 영향 등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 인구정책 주요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관 간 데이터 연계하여 지표 개발·생산 - 세부지표 모니터링 실시 및 수시 평가 - 계층별, 지역별 분석 등 수시 실시하여 정책작동 과정의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국민인식기반 정책발굴	- FGI, 인식·실태조사 등 국민인식조사 실시 - 정책 수요 반영 아젠다 발굴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심층평가는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들 중 예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앞으로 사업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 그리고 사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는 등 정책의 방향성 검토가 요구 되는 사업 중 성과 및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앙정부 인구정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여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정책의 평가 이외에 국가단위의 장기인구전망과 인구위기 대응방안

을 연구하는 것 역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주요 업무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에서는 국가인구정책과 관련한 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사회 및 경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정책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정책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¹⁾

(2)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

부산시는 지역의 인구위기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정책으로 정의하면서,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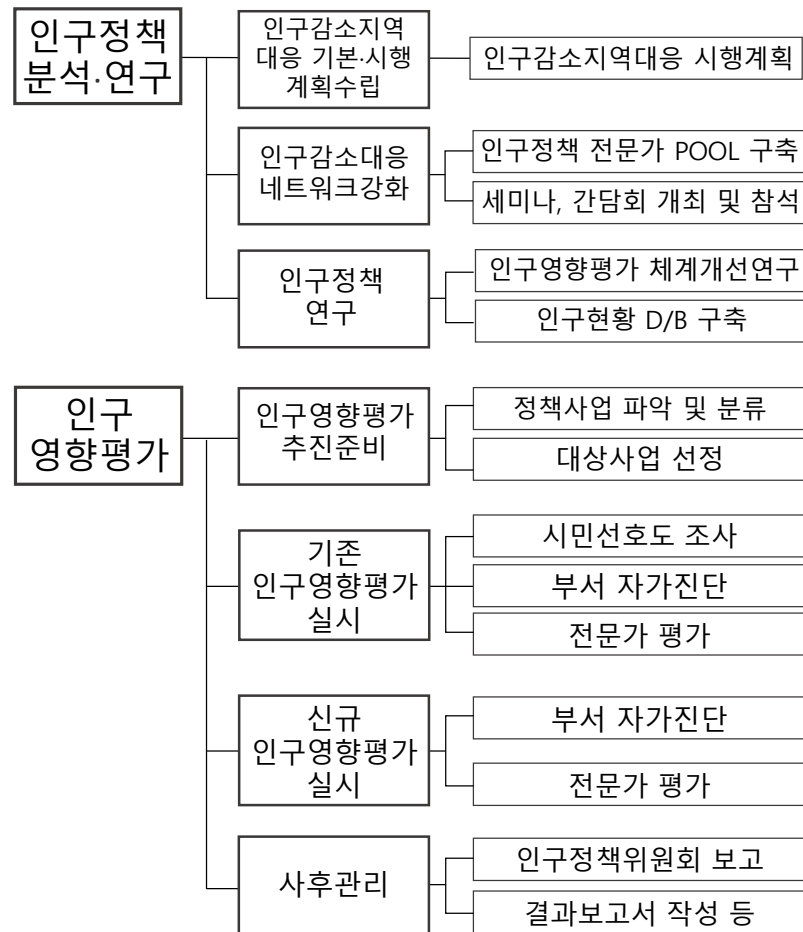
1) 보고서 작성시점인 2024년 9월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수행할 인구정책평가의 구체적 지표개선안은 공개되지 않았기에 센터의 구성 및 업무, 운영형태를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 2-7〉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으로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계획·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 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 실시 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구·군 의뢰과제를 포함한다) 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6. 인구영향평가 수행결과 보고 7. 센터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 (평가방법)	①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계획 및 실시 전에 인구영향평가자가진단서(이하 “자가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와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전문가 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개선 권고)	①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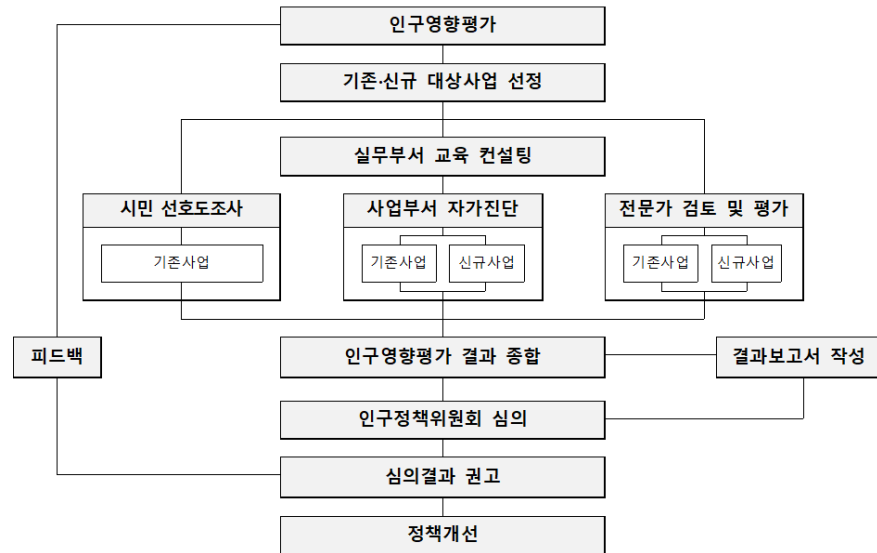
한편 부산연구원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2026년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인구영향평가의 주요 업무로는 〈그림 2-3〉과 같이 크게 인구정책 분석 및 연구 업무와 인구영향평가 업무로 구분된다. 먼저 인구정책 분석 및 연구

업무를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대응·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2024년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 주요 업무

인구영향평가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업무이다. 〈그림 2-4〉에 제시 되어 있는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자가진단’과 ‘전문가 검토 및 평가’, ‘시민선호도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책행위자들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 인구정책 사업 평가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림 2-4〉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흐름도

다음의 <표 2-8>은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서의 정책 실무자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책 실무자의 자가진단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정책 부합성과 인구정책 편의성, 인구정책 효율성의 3개 영역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정책의 부합성은 개별 사업이 부산시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개별 정책 사업이 청년, 노령인구, 출산 등 지역 인구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정책 이행 편의성은 사업 대상의 선정과 사업 수혜율, 사업의 금액 산정 방식 적정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파급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구정책의 효율성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와 정책 모니터링 지속 가능성, 정책 이행률에 대해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평가의 경우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먼저 전문가 기존사업 평가를 살펴보면 인구정책의 부합성은 정책 실무자 평가와 동일하게 개별 정책 사업이 부산시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청년, 노령인구, 출산 등 지역 인구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확인한다. 이후 인구정책 실행전략의 적절성 영역의 경우에는 각 사업 실적지표 및 정책사업의 실질 기여, 정책지원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인구정책의 효과성의 경우에는 사업의 사후관리체계 수립 여부, 성과지표의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및 실적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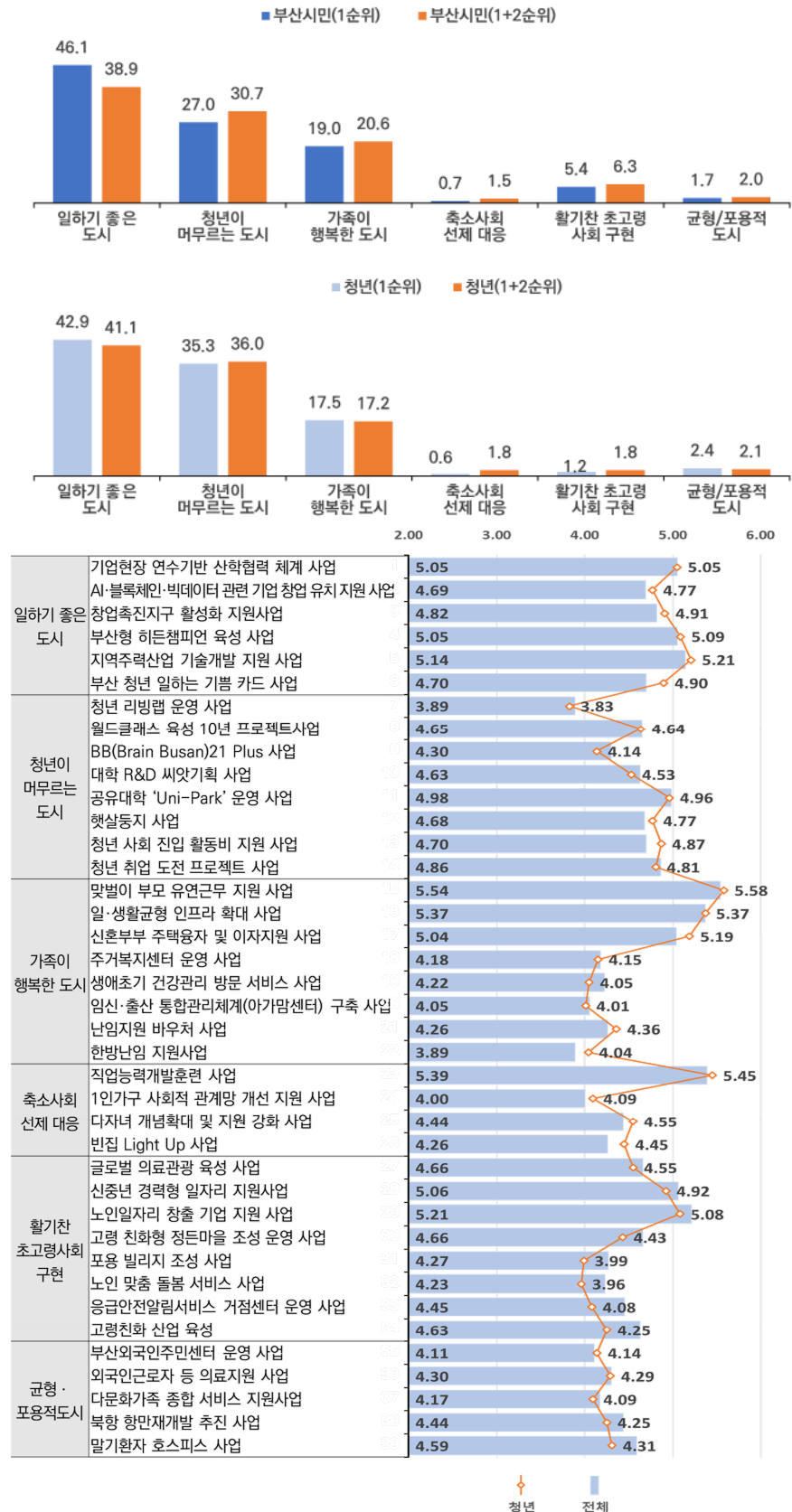
신규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역시 앞선 두 가지 평가 사례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인구정책 이행 편의성 및 효과성의 세부 내용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영향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표 2-8〉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정책 실무자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 지표

구분		항목	내용	평가점수
정책 실무자 자가 진단 평가	인구정책 부합성 (12점)	• 사업이 인구정책과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부산시 전체 인구의 정착 및 유입에 미치는 영향 점검	1-4점
		• 사업 계획 수립 시 인구구조 변화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인구구조에 변화에 대응한 사업 운영 등 방향성 점검	1-4점
		• 해당사업이 청년인구의 정착·유입(사회적 요인) 또는 고령화·출산(자연적 요인)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 청년 및 고령, 출산 등 정책과 유입에 미치는 효과 점검	1-4점
	인구정책 이행 편의성 (16점)	• 사업지원 대상선정 기준은 인구정책으로 적절한가?	• 사업지원 대상선정 기준이 적절한지에 관한 점검	1-4점
		• 사업의 연간 정책수혜율(수혜자, 지원 대상)은 적절한가?	•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수혜율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	1-4점
		• 사업 1인당(1개소당) 지원 금액 산정방식은 타당한가?	• 지원금액 산정방식은 타당하며, 금액은 적절한 금액을 유지하는지 점검	1-4점
		•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타 유관부서와의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 타 유관부서와의 협업 가능성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	1-4점
	인구정책 효율성 (12점)	• 사업에 대한 정책수혜자의 호응도는 높은가?	• 사업 추진 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에 대한 점검	1-4점
		• 사업지표는 정책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지표를 설정하였는가?	• 인구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설정인지 점검	1-4점
		• 연도별 성과목표 또는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 연도별 성과목표 및 실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점검	1-4점
전문가 평가 (기존 사업)	인구정책 부합성 (12점)	• 본 사업이 인구 정책과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사업인가?	• 부산시 전체 인구의 정착 및 유입에 미치는 영향 점검	1-4점
		• 본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인구구조에 변화에 대응한 사업 운영 등 방향성 점검	1-4점
		• 해당 사업이 청년인구의 정착·유입(사회적 요인) 또는 고령화·출산(자연적 요인)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 청년 및 고령, 출산 등 정책과 유입에 미치는 효과 점검	1-4점
	인구정책 실행전략 적절성 (16점)	• 사업의 실적지표는 평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인가?	• 사업의 실적지표가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로 설정되었는지 점검	1-4점
		• 사업의 정책 수혜자는 실질 인구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가?	• 사업 수혜자의 정착·유입 등 실질적 인구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점검	1-4점
		• 사업 1인당(1개소당)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은 타당한가?	• 지원금액 산정방식은 타당하며, 금액은 적절한 금액을 유지하는지 점검	1-4점
		•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타 유관부서와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 타 유관부서와의 협업 가능성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	1-4점
	인구정책 효과성 (12점)	•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수립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1-4점
		•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인가?	• 인구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설정인지 점검	1-4점

구분	항목	내용	평가점수
		연도별 성과목표 또는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연도별 성과목표 및 실적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 점검 1-4점
전문가 평가 (신규 사업)	인구정책 부합성 (15점)	본 사업이 인구 정책과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사업인가?	부산시 전체 인구의 정착 및 유입에 미치는 영향 점검 1-5점
		본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가?	인구구조에 변화에 대응한 사업 운영 등 방향성 점검 1-5점
		해당사업이 청년인구의 정착·유입(사회적 요인) 또는 고령화·출산(자연적 요인)에 미치는 기대효과 있는가?	청년 및 고령, 출산 등 정착과 유입에 미치는 효과 점검 1-5점
	인구정책 이행 편의성 (20점)	사업지원 대상선정 기준은 인구정책 사업에 부합한가?	사업지원 대상선정 기준이 적절한지에 관한 점검 1-5점
		사업의 연간 정책수혜율(수혜자, 지원대상)은 적정한가?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수혜율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 1-5점
		사업1인당(1개소당)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은 타당한가?	지원금액 산정방식은 타당하며, 금액은 적절한 금액을 유지하는지 점검 1-5점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타 유관부서와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타 유관부서와의 협업 가능성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 1-5점
	인구정책 효과성 (15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수립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는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및 방향성 점검 1-5점
		사업지표는 정책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또는 어떤 지표를 설정해야하는가?	정책사업의 효과를 고려한 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인지 점검 1-5점
		연도별 예산집행 항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타당성 점검 1-5점

마지막으로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의 시민선호도 조사의 경우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및 이해도를 파악하고,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수행하여, 각 정책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시민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2-5>는 2023년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서의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특징적인 사실은 일반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는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년세대나 노년세대에 대한 정책의 경우 청년과 일반시민과의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세대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부산연구원(2023)

〈그림 2-5〉 2023년 인구영향평가 시민선호도조사 결과

3) 사회복지정책 평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개선된 정책이 다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류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 평가 중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토대로 사회복지정책 평가체계와 평가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네 가지 주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지 확인하는 종합적 평가, 국민의 사회·경제적 욕구 충족 정도를 평가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간 정합성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설계 지원 평가로 효과성, 포괄성, 대응성, 통합성을 확보한다. 평가지표는 계획·집행·성과의 3개 분야 5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며 지표 구성은 <표 2-9>와 같다. 평가는 총 2회 실시하며, 1차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와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사업부서에 통보한 후, 사업부서가 제출한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보완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표 2-9〉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평가등급	비고
계획	사업목적 및 내용 적정성	•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판단	정상추진/개선필요	공통지표
집행	집행계획이행 수준	•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 적정 이해 여부		
	사업관리 적정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업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성과	성과지표 달성수준	•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치 달성 여부	-	평가전문기관 정성평가전문기관
	사업 우수성	• 사업 효과의 질적인 우수성		
종합평가			우수/정상추진/개선필요	평가전문기관 최종 확정

자료: 고숙자 외(2023)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와 함께 지자체별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표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 등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사업을 구성하는 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나뉘어 평가하며 본 장에서는 시도 단위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6개 평가분야와 22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며 지표 구성은 <표 2-10>과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특징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가능한 순환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단위별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평가를 가능하게 구축하였다. 또한, 통일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만들어 지역 간 사회보장정책의 실행과 성과를 비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표 2-10〉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지표유형	배점
계획 내용의 충실성	• 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구성의 체계성	정성 2.5
		내용의 타당성	정성 2.5
	• 시행계획 변경의 적절성	변경 내용의 적절성	정성 5
		변경 절차의 적절성	정량 10
	• 계획수립절차 및 기한 준수		정량 5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성 5
	• TF운영의 적절성		정성 5
시행결과 목표 달성도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대표성과의 타월성	정성 10
		우수사업의 타월성	정성 5
		성과목표의 달성도	정성 2.5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결과의 타월성	정성 10
		시·군·구 역량 강화 결과의 타월성	정성 10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결과의 타월성	정성 10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결과의 타월성	정성 10
		성과목표 달성도	정량 2.5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노력의 우수성		정성 7.5
	•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노력의 우수성		정성 7.5
시행과정의 적정성	• 입법·재정·행정 지원의 적정성		정성 5
	• 시행계획 모니터링 운영의 적정성		정성 10
	• 시행계획 자체평가 운영의 적정성		정성 10
시·군·구 조정	•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 및 조정의 적절성		정성 10

구분	평가지표	지표유형	배점
및 평가	• 시·도의 시·군·구 평가의 체계성	평가의 체계성	정성 5
		제출기한 준수 및 제출비율	정량 5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 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관리 충실성	정성	2.5
	•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정량	2.5

자료: 보건복지부(2023)

다음으로는 세부 사회서비스를 수행할 때 필요한 평가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평가체계는 구체적이고, 실행 중심적이며,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체계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가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평가 추진체계는 〈그림 2-6〉과 같다.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

〈그림 2-6〉 사회서비스 품질지표 평가체계

평가대상은 사회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섯 개 사회서비스²⁾로 나뉜다. 품질평가는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수행되며, 평가지표는 매 회기마다 개선을 위한 연구, 모의평가, 전문가 자문, 공청회를 거쳐 설정된다. 이후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5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반영을 통해 정책·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적 수준과 성과 평가를 위해 서비스 품질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지표를 도입하였다. 제공기관 우수사례 발굴 및 노력을 인정하는 자율형 성과지표와 유사·중복 내용의 평가지표를 재구조화 하여 지표를 간소화하였다. 5개 사업 공통 지표가 25개 있으며, 각 사업별 특화지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 장관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품질관리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 컨설팅·교육 등을 제공한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표 2-11〉 5기 사회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 품질평가 지표 구성

평가지표			평가항목	지표유형	배점
기관운영	운영체계	운영규정 및 지침	① 운영규정 ② 윤리행동강령 ③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지침 ④ 개인정보처리방침 ⑤ 제공인력 공유	정량+정성	4
		회계관리	① 서비스별 분리회계 ② 서비스별 수입·지출 장부 관리 ③ 서비스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④ 세입·세출결산서 공개	정량	2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① (필수) 안전보험 가입 ② 비상연락체계 구축 ③ 제공인력 안전교육 실시(연1회 이상) ④ 안전교육 참석 제공인력 비율(안전교육 수료율 90% 이상)	정량	3
		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PC 비밀번호 설정, 보안프로그램 설치, 캐비닛 잠금장치	정량	3
제공인력 관리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	노무관리	① 근로계약 체결 ② 급여지급 내역 ③ 4대보험 가입 ④ 퇴직금제도 운영 ⑤ 제공인력 건강검진 시행	정량	2
		제공인력 근속비율	① 제공인력 현황(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정량(자동)	3
		제공인력 교육	① 제공인력 교육현황표 ②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정량	3
	직원복지	복리후생	① 포상 및 복지제도 ② 포상 및 복지제도 실시 여부(필수)	정량	2
		고충처리	① 고충처리절차 마련 ② 고충처리 실시 여부(필수) ③ 고충처리 결과 안내	정량	2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운영체계	사업계획 및 평가	① 사업(운영) 계획서 ②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회의록	정량+정성	5
		서비스 정보게시	① 서비스 안내자료 ② 기관 홈페이지	정량	1

평가지표			평가항목	지표유형	배점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① 초기상담 관련 서류 ②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 일정표	정량	3
		서비스 제공계약	① 서비스 제공계약서 ② 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인력 정보	정량	3
		계획적인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계약서, 변경계약서 ② 서비스 제공계획서, 일정표, 서비스 제공기록지	정량	3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① 서비스 제공기록지	정량	3
	서비스 관리	이용자 불만처리	① 불만처리 절차 ② 불만처리 실시 및 회신 내역	정량	2
		서비스 정기회의	① 회의록, 회의일지, 회의결과보고서	정량+정성	4
		서비스 모니터링	①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 ② 이용자 모니터링 분석결과보고서 ③ 분석결과 활용 증빙자료	정량+정성	5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안내	① 종료안내 증빙자료	정량	1
		지역사회 연계	① 지역사회정보 안내 증빙자료 ② 협력체계 구축 증빙자료 ③ 연계실시 증빙자료	정량	3
	서비스 특화지표	서비스 연계관리(공통)	① 초기상담기록지 ② 서비스제공계획서, 일정표, 서비스제공기록지	정성	2
		서비스 제공환경(공통)	① 관찰평가(기관라운딩)	정성	2
		서비스 정기보고(공통)	① 서비스 제공기록지 ② 서비스 제공보고서 ③ 부모교육·상담 증빙자료	정량	2
		인권 보호(발달재활)	-	별도조사*	1
서비스 성과	이용자 유지율	이용자 유지율	① 바우처 결제 현황	정량	3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	별도조사*	25
	제공인력 만족도	제공인력 만족도	-	별도조사*	2
현장평가단	평가전반	기관장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	① 전문성 ② 적극성 ③ 의사소통 정도 ④ 리더십 ⑤ 제공인력 관리	정성	2
		평가자료 수준	① 현장평가 시 제공된 지표별 증빙자료 질	정성	2

* 별도조사는 평가대상 제공기관의 이용자·제공인력 대상으로 외부 리서치 기관에 위탁조사
자료: 보건복지부(2023)

4) 아동정책 평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증진 계획으로 청년정책이라는 세대별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특정 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 평가 사례로는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살펴보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 계획, 사업, 자치법규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아동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아동 욕구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림 2-7>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총괄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정책영향평가 대상 제안, 자체평가 실시, 평가 결과 반영계획 수립 및 이행을 수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외부 전문기관 선정과 전문평가를 수행한다. 정리하면 아동정책영향평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고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며, 아동정책영향 평가 역시 기관 예산으로 책정하여 수행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감독 하에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 권리 증진과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림 2-7〉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체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고 보건복지부 자체 평가는 평가대상기관 소관부서 담당자가 자체평가 점검표를 활용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절차가 별도 마련되어 있다. 소관부서 담당자는 사전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자체평가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이수 후 소관부서가 보장원에 자체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은 자체평가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반영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체평가 중 계획 평가는 아동 관점에서 아동의 제반 권리와 관계,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견 존중 및 참여, 아동의 이익 등을 평가한다. 사업 부문 평가는 계획 평가와 동일하게 아동 관점에서의 권리, 비차별, 참여 등을 평가하며, 추가적으로 투입(예산, 인력, 이용자, 협조기관, 기타 등), 실적, 성과 및 영향(장단기적 변화) 등을 평가한다. 자체평가는 정책 및 계획 수립 전이나 시행과정에서 아동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가 점검 목적이 있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 담당자들이 다시한번 아동권리를 점검하고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체평가 대상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업담당자의 권한이다. 한편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영향평가는 취지는 동일하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로 진행한다.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영향평가는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평가이고,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제도로 법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영향평가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이 연구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전문평가도 실시한다.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해 평가하며, 전문평가 대상 선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중 전문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플랫폼은 각 지자체별 영향평가 현황, 아동정책영향평가 연구, 자체평가시스템, 아동정책영향평가 주제 제안 창구 등을 포함하여 국민과 정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표 2-12〉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기타 자체평가 구성

구분	세부내용
사업 개요	• 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법령·자치법규, 관련 조례, 관련 행정규칙 등
	• 사업기간, 직·간접
	• 친화도 영역: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 사업유형: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 시·군·구 자체사업
사업 평가	•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회계 전년도·당해 연도 비교, 기금
	• 대상: 연령, 성별, 다문화가정, 이주민, 경제상황, 장애, 가족형태, 학교 밖 아동, 가정외보호아동, 모든 아동 등
사업 평가	• 투입(Input): 예산, 인력, 이용자, 협조기관, 기타 등
사업 평가	• 실적(Output)
사업 평가	• 성과(Outcome) 및 영향: 장단기적 긍정적 변화
타 법규와의 관계	• 갈등 우려에 대한 예/아니오 체크
아동 관점 반영	• 아동 제반 권리와의 관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 비차별의 원칙
	•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 아동의견 존중 및 참여
	• 아동 최선의 이익
총평	•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개선안 요약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표 2-13〉 아동정책영향평가 흐름

전문평가		자체평가	
- 대상선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지자체의 장)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필요 인정 - 자문위원회 제안 등으로 평가 대상 선정	- 주체 -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자문위원회)	-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교육 참여 및 이슈	-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
- 사전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지자체의 장)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필요 인정 - 자문위원회 제안 등으로 평가 대상 선정	- 주체 - 보건복지부	- 자체평가 실시 - 법령·자치법규, 계획, 사업·기타 자체평가 실시	-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전문평가 실시 -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이 전문 평가 실시	-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외부 전문기관	- 자체평가 검토 및 결과통보 -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제안	- 주체 - 보건복지부(자문위원회)
- 평가결과 안내 -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지자체의 장)에 정책 개선방안을 포함한 평가 결과 제시	- 주체 - 보건복지부	- 개선의견 제안 시 - 반영계획 제출: 수용, 불수용 - 주체: 지방자치단체 - 수용 시 컨설팅 요청가능 - 반영계획 컨설팅(평가대상기관 요청 시)/주체: 보건복지부(자문위원회)	
- 결과 게시 - 아동정책영향평가 온라인 플랫폼에 평가 결과 게시	-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자체평가 현황 게시(온라인 플랫폼)/주체: 아동권리보장원 - 이행확인/주체: 보건복지부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 홈페이지(검색일: 2024.10.11.)

제3장.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1. 청년정책 평가의 주요 원칙

청년정책은 정책대상의 기준이 특정연령대에 해당하는 전체라는 점에서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되는 다양한 정책들의 이질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 청년 연령대가 조레에 따라 늘어나면서 정책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도구 마련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은 성별, 연령, 학력, 지역, 고용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도구는 이러한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의 복잡다기한 이행 경로와 삶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김문길 외, 2022).

둘째, 정책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고용,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평가도구 역시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조은주, 2021).

셋째, 청년 참여와 주도성을 보장해야 한다. 청년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청년기본법에서도 청년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다(조경욱 외, 2023). 구성원 참여란 정책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정책에서 구성원은 정책 입안자, 집행자, 청년당사자, 전문가 등 해당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다. 구성원 참여는 정책평가 도구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청년정책의 평가도구 개발과정에서도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평가도구 개발과정에서 정책당사자의 참여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는 파악하기 용이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다면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청년당사자 참여는 실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평가 지표와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도구 개발 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평가의 목적과 방법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어 구성원 참여를 통한 정책평가 도구 개발은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 효과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책의 다양한 측면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등 전 단계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고, 정책이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폭넓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인 가치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선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조경옥 외, 2023). 특히 성별 분리통계 데이터 생성 및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청년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을 포함시키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청년기 격차는 이후 생애 전반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김문길, 2022).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의 요구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 체계가 유연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김기현, 2017).

2. 청년정책 평가체계 사례분석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중앙부처의 32개 기관은 23.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8개의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2.2조원의 예산 총 1,258개의 과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2022년 시행계획에서는 과제수와 예산 모두 증가하여 중앙부처의 경우 376개 과제의 24.6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1,412개 과제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조성은 외, 2022).

이와 같이 청년정책에 대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정합성 및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 제9조에서는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청년정책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단위에서 청년정책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조정실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정책 종합평가 및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출연연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연구위탁형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에서 청년정책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관련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구분		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시기
종합평가 (기관평가)	중앙 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청년정책 평가로 전환	‘23년도 실적	‘23년 11~12월
	시·도	대표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 추진역량에 대한 종합평가	‘23년도 실적	‘24년 3~5월
심층평가 (과제평가)	중앙 행정기관	청년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3년도 실적	‘24년 3~6월

자료: 국무조정실(2023)

〈그림 3-1〉 2024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체계

〈그림 3-1〉은 2024년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평가체계를 제시

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평가는 크게 종합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되는데, 종합평가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 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광역 시도에 대한 기관평가를 의미한다. 한편 심층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심층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 청년정책 종합평가

① 중앙행정기관 평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정책 종합평가가 진행되면서 세부적인 측면에서 평가의 내용 및 대상이 변화가 있었다. 다음의 <표 3-1>은 지난 3년 간 중앙부처 종합평가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이전 연도에 시행된 개별 청년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과제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지표는 ‘청년의 참여·주도성’ 15점과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40점, ‘사업계획 이행도’ 4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에 ‘청년의 삶의 질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 5점의 가점이 부여되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정책들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개선권고’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각 기관에 결과가 통보되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종합평가부터는 개별과제평가에서 대표 청년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로 평가 방식이 전환되었다. 청년정책 평가지표 역시 변화가 있어 ‘청년정책 추진성과’와 ‘청년참여·소통 확대’의 2가지 영역에 각각 5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에 기관에 가점을 반영하고, 기관별 평가 등급을 별도로 공개하며, 우수 과제 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추천하여 청년정책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보다 높였다.

〈표 3-1〉 시기별 청년정책 종합평가(중앙행정기관) 평가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이후
평가 대상	32개 기관, 345개 과제 (‘21년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 과제	32개 기관, 375개 과제 (‘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 과제	45개 기관, 약 135개 과제 (‘23년도 실적) 기관별 3개 대표과제	45개 기관, 약 390개 과제 (‘24년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높은 과제*
평가 방식	개별 과제평가	개별 과제평가	정부업무평가 (기관평가)	정부업무평가 (기관평가)
평가 지표	청년의 참여·주도성(15)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40) 사업계획 이행도(45) 청년의 삶의 질 개선효과 (가점, 5)	청년의 참여·주도성(15)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40) 사업계획 이행도(45) 청년의 삶의 질 개선효과 (가점, 5)	청년정책 추진성과(50) 청년참여·소통 확대(50)	-
평가 결과	과제별 평가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개선권고) 통보	과제별 평가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개선권고) 통보	정부업무평가 가점 반영 기관별 평가등급 공개	정부업무평가 가점 반영 기관별 평가등급 공개

* 청년 관련성이 높은 과제: ①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 ② 정책대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과제, ③ 사업예산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투입하는 과제, ④ 일반국민 대상 정책이나 청년에게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과제, ⑤ 일반국민 대상 정책이나 청년 특별대처를 포함하는 과제 등

자료: 국무조정실(2022), 국무조정실(2023), 국무조정실(202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② 광역 시·도 평가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년정책 종합평가 역시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다음의 〈표 3-2〉는 지난 3년 간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종합평가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 시기별 청년정책 종합평가(광역 시·도) 평가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가 대상	최대 85개 과제 (17개 시·도에서 최대 5개 대표과제 제출)	85개 과제 (17개 시·도에서 5대 분야별 1개씩 총 5개 대표과제 제출)	119개 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총 7개 대표과제 제출)
평가 분야	-	5대 분야별 평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7대 분야별 평가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평가 방식	과제평가	기관평가	기관평가
평가 지표	청년의 참여·주도성(15)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25) 사업추진 적극성(15) 사업성과 이행도(45)	청년의 참여·주도성(15)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25) 사업추진 적극성(15) 사업성과 이행도(45)	청년의 참여·주도성(2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20) 청년의 삶 개선(50), 청년의 정책이해(10) * 가점 : 기관장 관심도(3점), 청년정책 개선 노력(3점), 기초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2점), 청년DB 활용실적(2점) * 감점 : 자료제출의 적시성(-1점*지연일)
현장 평가	실적 제출자료 사실관계 확인	서면평가 결과상위 5개 내외 시도 현장실사(가점 5점)	서면평가 결과상위 5개 내외 시도 현장실사(가점 5점)
평가 결과	과제별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개선권고) 설정 우수 과제 선정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순위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순위 공개

자료: 국무조정실(2022), 국무조정실(2023), 국무조정실(202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평가대상 및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년정책 영역에 따른 평가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영역과 관계없이 각 시도에서 5개의 대표 과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2023년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서 1개의 대표과제를 제출하여 영역별 과제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후 2024년에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평가 영역 및 평가 과제 수를 확대 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평가 영역을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영역의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표 3-3〉 광역 시·도 평가를 위한 청년정책 7대 분야

구분	내용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공정채용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 일터 안전망 강화
주거	-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 청년집중 지원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금융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의 금융·재무·투자 교육
복지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 건강 증진 - 청년가정보육·돌봄
문화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 청년예술인 지원
참여·권리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자료: 국무조정실(2023)

평가방식 역시 변화가 있어, 2022년에는 개별 과제에 대한 과제평가 진행

후 과제별 평가 등급을 설정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광역지자체에 대한 기관평가를 수행 후 상위 지자체 중심으로 순위를 공개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평가지표는 ‘청년의 참여·주도성’ 15점,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25점, ‘사업추진 적극성’ 15점, ‘사업성과 이행도’ 45점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2024년 평가에서는 ‘청년의 참여·주도성’ 20점,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20점, ‘청년의 삶 개선’ 50점, ‘청년의 정책이해’ 10점으로 주요 평가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 및 성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가점과 감점 사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분야별 과제 수, 분야별 청년예산, 청년 1인당 예산과 같은 정량적 지표 역시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 점수에 가중하여 반영하고 있다. 현장평가 역시 2022년의 경우 실적 제출 자료의 사실관계만 확인하였으나, 2023년 이후에는 서면평가 결과 상위 5개 내외 시·도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2025년 평가부터는 각 지자체의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대비 청년위원 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의 의견이 정책영역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4〉 2024년 광역 시·도 종합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

구분	내용
청년의 참여 주도성 (20점)	- 계획수립 시 청년의견 반영도 (10) - 정책집행 시 청년과의 소통 충실성 (1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20점)	- 사업대상 청년규모의 정확성 (10) - 사업내용의 청년실태 반영도 (10)
청년의 삶 개선 (50점)	- 성과지표와 청년의 삶 관련성 (15) - 청년의 삶 개선정도(35)
청년의 정책이해 (10점)	청년정책에 친숙한 정도 (10)
가점 사항	- 기관장의 청년정책 관심도 (+3점) - 청년정책 개선노력 (+3점) - 기초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2점) - 청년DB 활용실적 (+2점)
감점 사항	자료제출의 적시성 (-1점 * 지연일)
기타	'25년('24년도 실적) 평가부터는 시도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대비 청년위원 비율 평가지표에 반영

자료: 국무조정실(2023)

세부지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의 참여 주도성에서 ‘계획수립 시 청년 의견 반영도’란 각 청년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정책 집행 시 청년과의 소통 충실성’이란 정책 집행 과정 중 청년의견 수렴이 가능한 소통기구를 운영·활용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 적절히 검토·대응한 정도를 측정한다.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에서 ‘사업대상 청년규모의 정확성’이란 개별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측정한다. ‘사업내용의 청년실태 반영도’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내용이 청년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지표이다.

청년의 삶 개선 항목은 설정한 성과지표가 청년의 삶과 관련 있는지, 그리고 각 정책이 청년의 삶을 얼마만큼 개선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성과지표와 청년의 삶 관련성’이란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성과를 대표하는지, 성과목표가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청년의 삶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청년의 삶 개선 정도’는 각 사업의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과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의 삶 개선정도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청년정책 이해 항목의 ‘청년정책에 친숙한 정도’는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청년 친화적 매체를 통해 청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한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점 및 감점 항목을 살펴보면 ‘기관장의 청년정책 관심도’는 청년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를, ‘청년정책 개선노력’은 청년정책 평가 결과의 개선의견 반영 정부 및 외부 기관에서의 지적 사항 개선 노력 등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을 평가한다. ‘기초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항목은 광역 지자체에 속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청년정책 예산 지원 및 협업, 과제 관리, 애로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기초지자체 지원 활동을, ‘청년DB 활용실적’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소통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평가실적이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 지연 기간을 계산하여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2) 청년정책 심층평가

다양한 경제·사회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청년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수요가 존재한다. 더욱이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청년정책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부처 간 중복 과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의 경우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핵심과제 및 과제그룹을 선정하여 이를 심층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정책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3-5>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청년정책 중앙부처 심층평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5〉 시기별 청년정책 중앙부처 심층평가 평가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가 대상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청년맞춤형공적임대주택공급(국토부), 국가장학금(복지부) 등 10개)	청년정책 현안 관련 과제그룹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등)	청년정책 현안 관련 과제 또는 과제그룹
평가 방식	과제평가	과제평가	과제평가
분석 항목	사업 필요성 사업내용 및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사례 연구 유사사업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제안 등	해외사례 연구 유사사업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제안 등
평가 결과	과제별 세부 개선방안 도출	과제별 세부 개선방안 도출	과제별 세부 개선방안 도출

자료: 국무조정실(2022), 국무조정실(2023), 국무조정실(202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2022년 청년정책 심층평가에서는 청년 체감도가 높다고 판단된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부의 ‘청년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복지부의 ‘국가장학금’사업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및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심층평가를 진행하였다. 이후 2023년부터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서 나아가 청년정책 현안과 관련된 과제그룹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례로 <표 3-6>과 같이 2023년에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평가의 경우 3개 부처에서 추진된 6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을 심층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사업 연계 및 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심층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표 3-6〉 2023년 청년정책 현안 과제 그룹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부처명	사업명
보건복지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국토교통부	• 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여성가족부	• 내일이룸학교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지원

자료: 국무조정실(2022)

심층평가의 과제 선정은 청년정책의 수혜자 범위를 비롯한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평가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업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그 사업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 역시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고려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중복성이 높아 유사 사업간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역시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3-7〉은 청년정책 심층평가 분석 틀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사업 개요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사업의 목적과 배경, 사업대상 및 선정 기준 등 정책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평가 개요 및 주요 쟁점 파악에서는 평가 목적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주요 평가방법과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특히 심층평가의 핵심 목표가 대상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파악은 중요한 과정이다.

〈표 3-7〉 청년정책 심층평가 분석 틀

구분	분석내용	분석방법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목적 • 사업배경 및 연혁 •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 사업예산 • 지원내용 • 추진경과 • 사업주체 및 전달체계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서면 검토 • 기존 문헌 • 전문가 자문
평가개요 및 주요 쟁점 파악	• 평가목적 및 필요성 • 평가방법: 평가대상, 이용가능한 자원 규모, 분석범위, 분석기간 등 • 주요쟁점: 선행연구, 예산정책처, 국정감사자료 등 국회자료 또는 매스컴 보도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수행기관 및 참여자 FGI를 통한 사업별 주요 이슈 파악	• 서면 검토 • 기존 문헌 • FGI(참여자, 실무자) • 전문가 자문

구분	분석내용	분석방법
사업 적절성 및 필요성	• 해당사업의 필요성·적시성·공익성 •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일관성 - 청년정책 취지와와의 부합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수혜 받는 대상 규모 - 사업구조 및 재정 지원방식의 적절성 - 유사사업과의 관계	• 서면 검토 • 기존 문헌 • FGI(참여자, 실무자) • 전문가 자문
집행과정	• 투입: 예산, 인력, 전달체계 등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자원 분석 • 활동: 수행체계 및 전달체계, 추진계획 이행, 예산집행률, 청년과의 소통 반영여부 등 집행과정에서의 추진내용 및 사업내용 분석 • 산출: 사업수혜자 수, 제공된 서비스 횟수, 공급물량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출물 분석 혹은 산출물로서 제시된 성과지표 관련 의견	• FGI(참여자, 실무자) • 서면 검토 • 기존 문헌 • 전문가 자문 • 사업집계 행정자료 • 국가승인통계
사업성과	• 참여자 성과: 정량적 성과뿐 아니라 참여자 만족도, 체감도, 삶의 질 개선 등 정성적 성과 분석 • 수행기관 성과: 사업 수행기관이 인식하는 집행과정 및 사업 성과 분석	• FGI(참여자, 실무자) • 사업집계 행정자료 • 국가승인통계 • 전문가 자문
종합평가	• 주요 정책성과 • 문제점 • 개선 보완 방향	

자료: 이아영 외(2022)

다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등 사업의 적절성 및 필요성을 분석하며, 이후에는 사업 성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한다. 사업성과의 경우에는 정책 참여자 관점에서 효과성과 사업 수행기관이 인식하는 집행과정·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과제별 주요 정책성과 및 문제점, 개선 및 보완 방향에 관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심층평가를 위해서는 주요 문헌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이외에 정책 참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을 수행한다. 정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는 정책의 참여 경로 및 동기를 비롯하여 사업 참여 과정별 경험과 함께 사업 및 과정에서 인식한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 실무자 FGI에서는 집행과정 및 성과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2)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청년정책 평가

서울시는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약’, ‘구출’, ‘기회’ 라는 3개 비전을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공간 분야의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초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출범시켜 운영 중에 있다.

〈표 3-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역할

조항	내용
제20조 (청년지원기관 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광역청년센터는 각 자치구별 설치되어 있는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과 더불어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가 통합하여 2024년 1월 출범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광역-지역 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성과 창출 및 역할 확립하고, 서울청년공간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정책 정보관리 및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 확산에 이바지 하는 등 지역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 서울광역청년센터(2024)

〈그림 3-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지역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 허브로서의 역할 외에도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 및 성과를 측정·관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역시 〈그림 3-3〉과 같이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공통사업에 대한 목표 실적 관리 및 근거 기반의 실적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 월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성과점검 및 분석결과 공유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성·정량 평가를 포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체계 구축하고,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자문평가단을 운영하여 성과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전년도 대비, 단축형 문항으로 구성된 스크리닝 검사 도구를 도입하여 초기 이탈률을 줄이고, 유형별 맞춤형 1:1 심리상담 및 심리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심리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위기 청년들이 지역사회 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되어 밀착 도움을 받도록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기간 | 2023. 3. ~ 2023. 12.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0,031명 및 청년상담파트너(상담사) 249명

주요실적 | 참여자 상담 제공 연 **71,542**명 참여자 만족도 **4.23/5점**

참여자가 기관·병원 연계 총 **324**건

상담사 간담회 총 **4**건 / 연 **359**명

소진예방 자조모임 **4**건 / 연 **147**명



2024년 사업 방향



유형별 맞춤 1:1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존 3단계 유형을 4단계로 확대하여 세밀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 자기이해상담 회수를 4회에서 6회까지 확대하여 사전 심리검사 및 면담을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기이해상담 이후 유형별 맞춤형 심리서비스로 심층상담 4회 추가, 마음건강 특강, 마음건강 집단상담, 마음건강 어플리케이션,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청년들의 사회 적응력이 향상되고, 사회 진입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 서울광역청년센터(2024)

〈그림 3-3〉 2023년 서울시 청년정책사업 연차보고서

한편,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센터 정책사업에 대한 일반적 평가 이외에 서울시 핵심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및 정책 효과성에 관한 평가연구 역시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수행된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분석 및 추적조사”³⁾의 경우 ‘서울청년 수당’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참여자 및 2023년 선정자/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 및 참여자 추적조사를 진행하였으며(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3),

3) 이 연구에서는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조사에서는 30,9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참여자 사후조사에는 7,4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22년 정책 참여자 추적조사의 경우에는 6,4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평가결과와 신뢰성을 높였다.

영케어러 케어링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지역의 핵심 청년정책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효과성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2)⁴⁾.

3. 부산시 청년정책 및 평가체계

1)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현황

청년은 경제활동의 주축 세대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주체이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청년유출 현상이라는 이중적 인구위기 구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현실에서 부산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여 삶의 질 및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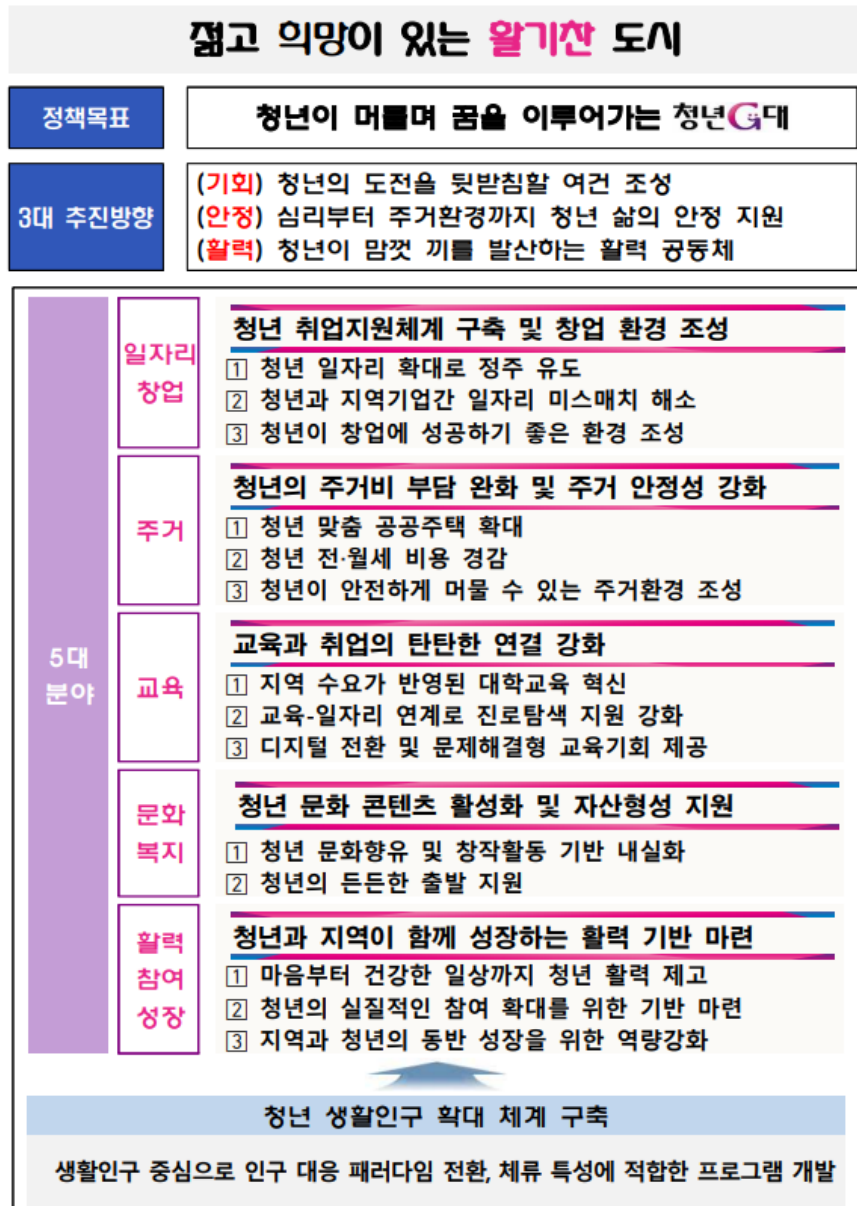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3-4>는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1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부산연구원의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및 “부산청년정책 비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청년을 위한 4대 전략 및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김종욱 외, 2018; 박경옥 외, 2019).

구분	제1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간	2019 - 2023	2024 - 2028
비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
목표	희망청년, 독립청년, 행복청년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G대
구성	4대 전략(탐색, 참여, 자립, 안정), 15개 핵심과제	5대 분야(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14개 핵심과제

<그림 3-4>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4) 제시된 연구들은 서울광역청년센터 출범 이전 조직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수행된 연구이다.

2024년에 발표된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의 5대 분야의 1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자료: 부산광역시(2024d)

〈그림 3-5〉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2)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및 평가체계

(1)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운영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는 기 수행된 청년정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표 3-9〉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사회·경제·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 창업 육성·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 생활안정 바. 청년 주거안정 사. 청년의 건강증진 아. 청년 권익향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2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교류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정책의 발굴 및 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시행계획상에서의 평가 역시 지난해 추진된 청년정책 추진실적 정리 및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2024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의 2023년 정책 평가를 살펴보면 정책 브랜드 ‘청년G대’의 구성, 청년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 확대,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간의 청년정책 연결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투입된 예산 대비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미흡하고 전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진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4a).

한편 2023년 수행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제1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목표 대비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성평가는 5개 분야의 세부 사업유형 및 내용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정량평가는 세부사업의 연도별 성과목표 및 추진실적, 달성률 지표를 활용하였다.



자료: 민희 외(2023)

〈그림 3-6〉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의 성과분석 지표

(2)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서는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청년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연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부산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에는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규모와 집행률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각 개별사업의 개요와 함께 간략한 사업별 추진실적과 정책 향후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검색일: 2024.10.08)

〈그림 3-7〉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심의

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 진단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 및 서울시의 청년정책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평가 지표에 관한 문제이다.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특성을 볼 때, 모든 정책들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평가의 경우에는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평가지표 마련 및 체계를 수립하였다(배정희·김기현, 2020).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지표 수립에 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의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예산 집행률과 개별 사업이 설정한 목표성과의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자체평가에서 외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청년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부산시 청년산학국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의 외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외부평가의 형태로 정책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이후 평가 환류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는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 이후에 결과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 이후, 이를 다시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환류체계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1.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도출 과정

1) 전문가 자문 개요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은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조사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2024년 2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서울과 세종시에서 각각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청년정책 전문가 5명이 참여하였으며 세종에서는 청년정책 평가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여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은 1차 자문 결과 및 주요 정책평가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전문가 자문에는 청년정책 전문가와 함께 인구정책평가 전문가와 청소년정책평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안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의 적절성 및 수정 필요 사항과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 그리고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 검토를 진행하였다.

3차 전문가 자문은 2차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3차 자문의 인적 구성은 청년정책 전문가 7명과 부산시 청년정책 조정위원 6명, 부산연구원 전문가 4명으로 이루어 졌으며, 2차 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평가지표 및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을 2024년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이메일 조사를 통해 수합하였다.

〈표 4-1〉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내용
1차	조사목적	•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지표 구성을 위한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 검토
	조사시기	• 2024년 2월 26일 - 27일
	조사대상	• 서울시 청년정책 전문가 5명, 청년정책 평가 전문가 2명
	조사방법	• 서울 및 세종에서 자문회의 실시
	조사내용	• 지역 및 중앙의 청년정책 평가 사례 조사 • 청년정책사업 평가 대상 및 지표 구성 조사
2차	조사목적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 (1차)
	조사시기	• 2024년 7월 25일
	조사대상	• 청년정책 전문가 1명, 인구정책평가 전문가 1명, 청소년정책평가 전문가 1명
	조사방법	• 서울에서 자문회의 실시
	조사내용	•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수정 필요 사항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3차	조사목적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 (2차)
	조사시기	• 2024년 8월 7일 - 16일
	조사대상	• 청년정책 전문가 7명, 부산시 청년정책 조정위원 6명, 부산연구원 전문가 4명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서면자문
	조사내용	•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수정 필요 사항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2) 참여 전문가

전문가 자문위원은 크게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와 정책평가 관련 전문가, 그리고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정책 전문가는 청년정책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청년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리고 청년정책평가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총 18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이외에 인구 및 청소년 정책 평가와 관련한 전문가가 각각 1명씩 참여하여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한편 지역 청년정책 평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차 전문가 자문에서는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속의 6명 위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표 4-2〉 자문참여 전문가

이름	소속	전공	자문참여		
			1차	2차	3차
강**	○○○○○○도	청년정책	X	X	○
강**	○○○○○○연구소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X	X	○
김**	○○○○청년센터	청년정책	○	X	X
김**	○○연구원	문화정책	X	X	○
김**	○○ 청년정책 네트워크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X	X	○
김**	○○○○○○○○연구원	청년정책	X	X	○
노**	○○대학교	복지정책	X	X	○
박**	○○○○○○소	청년정책	X	○	X
박**	○○대학교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X	X	○
박**	○○대학교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X	X	○
송**	○○○○청년센터	청년정책	○	X	X
신**	○○○○청년센터	청년정책	○	X	X
신**	○○○○○○○○연구원	청소년·청년정책	X	○	○
유**	○○연구원	인구정책	X	○	X
이**	○○대학교	복지정책	X	X	○
이**	○○대학교	문화·사회학	X	X	○
이**	○○○○○○○○연구원	경제학	○	X	X
이**	○○○ 청년정책 네트워크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X	X	○
이**	○○대학교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X	X	○
이**	○○연구원	보육정책	X	X	○
장**	○○연구원	복지정책	X	X	○
정**	○○○○청년센터	청년정책	○	X	X
조**	○○○○○○○○연구원	사회보장·복지정책	○	X	X
조**	○○대학교	젠더·돌봄	X	X	○
천**	○○○○청년센터	청년정책	○	X	X
최**	○○연구원	복지정책	X	X	○

3) 전문가 자문 결과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 안 구성과 관련하여 총 세 차례 자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자문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와 함께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성 시 평가 유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다음의 〈표 4-3〉은 1차 자문결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책평가의 지속적인 수행과 개선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포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성과평가의 안정성 및 기준을 보완해 나가는 것 역시 평가 체계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평가유형 및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사업 평가사례 중 일반평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중앙의 청년정책 일반평가는 ‘청년의 참여·주도성’과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시행계획 이행도’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부산시 청년정책평가 역시 이 같은 청년정책 평가기준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표 4-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1차 자문결과

주제	자문 결과
평가체계 구성 시 고려사항	- 정책평가의 지속적인 수행 및 개선으로 평가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정량·정성 평가를 포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체계 구축 - 연속성 있는 자문평가단 운영을 통해 성과평가의 안정성 및 기준 보완
평가유형 및 구성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사업 평가는 일반평가와 심층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평가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일반평가의 경우 청년의 참여·주도성과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시행계획 이행도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일반평가의 경우 지자체 청년 참여·주도성, 지자체 청년 삶·환경 반영도, 사업추진 적극성, 성과달성도로 구성

이후 연구진은 주요 사례 조사 및 1차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4-1〉의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초안을 작성하였다. 연구진은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해 ‘정책 대상’과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그리고 ‘청년정책 평가’, ‘정책 효과성’,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정책대상의 경우 해당 청년정책이 어떠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과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 정책이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가지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의 경우 해당 사업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상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청년생활인구’의 6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연관성을 각각 평가 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청년정책 평가의 경우에는 각 사업이 청년정책으로 적합한 사업이며,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산지역 청년실태(현안) 반영도’, ‘사업대상(수혜자, 지원 대상/기관)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이행 및 목표 달성도’, ‘부산청년의 삶 개선 효과’, ‘청년 참여/주도성’, ‘(계획수립 및 추진 시) 청년의견 반영/소통의 충실성’, ‘(청년단체, 공공기관 등) 타 조직과의 협업 수행’의 8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5점 척도 형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효과성’과 ‘개선·보완 필요사항’, 정책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문항을 만들어 평가 참여자가 각 정책에 대한 정성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서							
응답자 정보	이름			연락처			
	소속			직위			
사업명							
정책대상	(연령) 해당 사업은 어떤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가? * 중복 응답 가능 (해당 사항에 ☑)						
	☐ 18~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지위) 해당 사업은 어떤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가? * 중복 응답 가능						
	☐ 학생	☐ 미취업 청년	☐ 취업 청년	☐ 신혼/기혼청년			
	(제한) 해당 사업을 지원·수혜 받는데 있어 어떠한 형태의 제한이 존재하는가?						
	☐ 부산 방문 청년	☐ 부산 거주 청년	☐ 경제여건	☐ 가구구조	☐ 경력		
	☐ 거주지역	☐ 직업	☐ 학력	☐ 추천/선착순	☐ 기타()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관성	다음 제시되는 영역의 설명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과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						
	영역	설명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일자리·창업	청년고용률 상승,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통한 구직기간단축, 청년창업환경 조성	☐	☐	☐	☐	☐
	주거	청년 맞춤 주택공급,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	☐	☐	☐
	교육	대학교육혁신, 진로탐색지원, 디지털 전환 및 문제해결형 교육 기회 제공	☐	☐	☐	☐	☐
	문화·복지	청년 문화향유기회 확대, 신진청년예술가 활동 기회 제공, 사회출발청년 및 경제위기 청년 지원	☐	☐	☐	☐	☐
	활력·참여·성장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청년-지역 동반성장	☐	☐	☐	☐	☐
	청년 생활인구	청년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인구이동(유출) 대응	☐	☐	☐	☐	☐

	해당 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얼마나 충실/부합 하는가? (해당 사항에 ☑)						
	항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해당사항 없음
청년정책 평가	부산지역 청년실태(현안) 반영도	☐	☐	☐	☐	☐	
	사업대상(수혜자, 지원 대상/기관)의 적절성	☐	☐	☐	☐	☐	
	성과지표의 적절성	☐	☐	☐	☐	☐	
	계획이행 및 목표 달성도	☐	☐	☐	☐	☐	
	부산 청년의 삶 개선 효과	☐	☐	☐	☐	☐	
	청년 참여/주도성	☐	☐	☐	☐	☐	☐
	(계획수립 및 추진 시 청년의견 반영/ 소통의 충실성	☐	☐	☐	☐	☐	☐
	(청년단체 공공기관 등 타 조직과의 협업 수행	☐	☐	☐	☐	☐	☐
정책 효과성	※ 해당 정책이 부산지역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						
개선·보 완 필요사항	※ 해당 정책의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						
종합의견	※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해 종합적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						

〈그림 4-1〉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초안

2차 자문회의에서는 작성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초안을 중심으로 현재 구성한 평가지표 안이 청년정책평가의 목표 및 방향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은 〈표 4-4〉와 같다.

먼저 자문위원들은 청년정책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지역 청년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평가의 목적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청년정책평가에 있어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한 거시적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목표 및 지표설정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평가지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정책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수정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의 적절성’, ‘청년참여 주도성’과 같은 지표의 경우 응답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구성된 지표 이외에 ‘사업의 지속성’, ‘청년정책으로의 적합성’,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추가 지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와 우수 사업에 대한 추천 여부 역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구성된 영역과의 연관성 문항 중 청년생활인구의 경우 다른 영역 구분과 위계적 수준이 다른 개념이라는 지적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표 4-4〉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2차 자문결과

주제	자문 결과
청년정책평가의 목표 및 방향성	• 부산지역 청년의 욕구에 대해 정확히 파악 한 이후 개별 정책들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해야 함 • 정책평가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정책평가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 가능 • 청년정책의 기본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ex: 통계청 산출 데이터 등)를 활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목표 및 지표 설정에 있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청년정책 평가지표	• ‘성과목표의 적절성’ 이라는 표현은 사업계획상의 목표로 혼동 될 여지가 있음 • 과정중심 지표와 결과 중심 지표가 혼재되어 있음 • ‘청년참여 주도성’의 경우 정책 개발과정 및 집행 과정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개념임 • 사업의 지속성, 혹은 지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응답자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음 • 개선 필요성 역시 정량적 형태로 ‘전면 개선’, ‘일부 개선’, ‘현행 유지’ 형태로 평가 가능함 • 청년정책으로의 적합성을 질문 문항에 추가 고려 • 전반적인 사업 평가 및 우수사업 추천 여부를 문항으로 구성 • 정책 대상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 • 생활인구의 경우 정책 영역의 수준이 다름 • 기타 이탈자 및 문항오류에 관한 논의

2차 자문회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은 〈그림 4-2〉와 같다. 서면자문 형태로 진행된 3차 자문회의에서는 수정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과 함께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요약’ 자료와 추후 청년정책 평가를 위해 제공될 ‘정책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진행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수정안에서는 청년정책평가지표의 순서를 평가 흐름에 맞게 재배치하였으며,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수행의 적절성', '정책의 개선 및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평가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평가지표 설정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특수성 및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문가 이외에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주요 영역별 부산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 중 지원·수혜를 받는데 있어 제한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조정하였다.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서							
응답자 정보	이름				연락처		
	소속				직위		
사업명							
정책대상	(연령) 해당 사업은 어떤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가? * 중복 응답 가능 (해당 사항에 ☑)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	☐	☐	☐	☐		
	(지위) 해당 사업은 어떤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가? * 중복 응답 가능, 기타의 경우 내용을 적어주세요.						
	학생	미취업 청년	취업 청년	신혼/기혼	기타		
	☐	☐	☐	☐	☐ ()		
	(제한) 해당 사업을 지원·수혜 받는데 있어 제한이 존재하는가? * 기타의 경우 내용을 적어주세요.						
	모든 청년	부산거주 청년	일부 제한 (성별, 소득 등)	추첨/선착순	기타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관성	다음 제시되는 영역의 설명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과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						
	영역	설명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일자리 ·창업	청년고용률 상승,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통한 구직기간단축, 청년 창업환경 조성	☐	☐	☐	☐	☐
	주거	청년 맞춤 주택공급,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	☐	☐	☐
	교육	대학교육혁신, 진로탐색지원, 디지털 전환 및 문제해결형 교육 기회 제공	☐	☐	☐	☐	☐
	문화 복지	청년 문화향유기회 확대, 신진청 년예술가 활동 기회 제공, 사회 출발청년 및 경제위기 청년 지원	☐	☐	☐	☐	☐
	활력· 참여· 성장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청년-지역 동반성장	☐	☐	☐	☐	☐
	청년 생활 인구	청년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인구이동(유출) 대응	☐	☐	☐	☐	☐

청년정책 평가	해당 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얼마나 충실/부합 하는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								
	항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해당사항 없음		
	부산지역 청년실태(현안) 반영도	☐	☐	☐	☐	☐	☐		
	(계획수립 및 추진 시) 청년의견 반영/소통의 충실성	☐	☐	☐	☐	☐	☐		
	사업대상(수혜자, 지원 대상/기관)의 적절성	☐	☐	☐	☐	☐	☐		
	성과지표의 적절성	☐	☐	☐	☐	☐	☐		
	계획이행 및 목표 달성도	☐	☐	☐	☐	☐	☐		
	청년 참여/주도성	☐	☐	☐	☐	☐	☐		
	부산 청년의 삶 개선 효과	☐	☐	☐	☐	☐	☐		
	(청년단체 공공기관 등 타 조직과의 협업 수행	☐	☐	☐	☐	☐	☐		
종합 평가	해당 정책은 부산시 청년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정책입니까?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	☐	☐	☐	☐				
	해당 정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함	부적절함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	☐	☐	☐	☐				
	해당 정책이 개선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면 개선	일부 개선	현행 유지	확대	대폭 확대				
	☐	☐	☐	☐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해당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종합의견	※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해 종합적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								

〈그림 4-2〉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수정안

〈표 4-5〉는 3차 자문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청년정책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자들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인 ‘기회’, ‘안정’, ‘활력’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강조되었다. 또한 평가방법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청년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평가결과 및 환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심층평가 적용과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추진되는 청년친화도시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있었다.

청년정책 평가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구성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구성을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작성되어야만 하며, 평가대상의 구체적인 성과 관련 데이터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도 정책수혜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활용하여 정책평가 시 의견을 반영하거나, 일반평가 이외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중요한 지점으로 지적되었다.

〈표 4-5〉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3차 자문결과

주제	자문 결과
정책평가의 방향성	- 부산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인 ‘기회’, ‘안정’, ‘활력’의 개념을 평가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정책 평가방법을 광역지자체 자체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청년정책이 매우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평가 적용이 필요함 - 광역지자체의 정책이니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연계 방안, 청년정책평가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 2024년부터 추진되는 청년친화도시 관련하여 기초지자체 평가 수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 평가체계	-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서 평가 자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책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청년정책 평가의 방향성을 고려한 정책사업 결과보고서 및 평가 참고자료 작성이 필요 - 평가 대상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강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외에도 심층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 - 사업범위, 예산, 목표 등이 매우 상이한 많은 정책을 적은수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정책 개선과 보완을 위한 의견 수렴이 중요 - 평가과정에서 청년정책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청년정책 평가지표	- 청년정책 평가 지표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측정내용, 측정방법, 판단기준(평가준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정책대상(연령, 지위, 제한) 부분은 평가위원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담당기관이 정리해서 제공하거나 평가서 양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의 이행 과정에 관한 지표가 부족한 편으로 보여 관련한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예산 대비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 중복지표, 이중의미 지표 통합 및 분리가 필요 - 청년정책평가 및 종합평가의 어휘표현 수정이 필요함 - 부산시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 - 종합평가 과정에 ‘개선 및 확대 필요성’을 각각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역 청년실태(현안) 반영도’의 경우 평가자들의 주관이 너무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음 - 평가지표가 간결하여 평가 결과의 명료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판단됨 - 평가자가 정책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 함 - 종합평가를 5점 척도로 할 경우 광역시가 성과평가를 환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적절성은 청년정책평가의 결과(총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음
평가결과 분석	- 평가결과 분석과정에서 주요 문항 간 상관성·인과성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유지 혹은 축소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책의 산출결과(outcome)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정책 경험자의 체감 수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타의견	-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수정 필요 사항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구성된 평가 지표들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내용 및 방법, 평가 준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산지역 청년 실태(현안) 반영도’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과정에서 관련 지표 역시 부족한편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예산 대비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항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종합평가 과정에서 ‘개선

및 확대 필요성과 같이 각각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 문항을 분리하거나, 종합평가의 경우 표현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평가자가 정책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다수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척도를 5점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 결과를 환류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7점 척도를 제안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평가결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문항 간 상관성 및 인과성 분석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후 정책에 대한 판단을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와 정책 경험자의 체감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수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과 함께 청년정책 평가 방향성과 체계에 대한 기타 의견들이 포함되었다.

2.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다음의 <그림 4-3>은 앞서 설명한 세 번의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최종안이다.

청년정책 평가 (사업명: ○○○○○○○○○)								
사업영역								
다음 제시되는 영역의 설명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과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관련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								
영역	설명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일자리·창업	청년고용률 상승,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구직기간단축, 청년창업환경 조성	☐	☐	☐	☐	☐		
주거	청년 맞춤 주택공급,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	☐	☐	☐		
교육	대학교육혁신, 진로탐색지원, 디지털 전환 및 문제해결형 교육 기회 제공	☐	☐	☐	☐	☐		
문화·복지	청년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회출발청년 및 경제위기 청년 지원	☐	☐	☐	☐	☐		
활력·참여·성장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청년-지역 동반성장	☐	☐	☐	☐	☐		
청년 생활인구	청년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인구이동(유출) 대응	☐	☐	☐	☐	☐		
청년정책 사업평가								
영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자료의 충실성	23년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획수립 및 이행	사업 계획수립과 이행이 충실하게 진행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과지표 적절성	사업의 성과지표(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목표달성	해당 사업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개선 필요성	해당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해당 사업에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 평가								
영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필요성	해당 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효과성	해당 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효율성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시간·예산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정책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속 필요성	해당 사업의 부산시 청년정책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종합의견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해 종합적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 4-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최종안

먼저 제안된 평가지표 안을 살펴보면 크게 ‘사업영역 평가’와 ‘청년정책 사업평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사업영역평가는 해당 청년정책 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청년 생활인구’의 분야와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 사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일자리·창업’ 영역의 경우 해당 정책이 청년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거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구직 기간 단축, 청년창업환경 조성 등 부산지역 청년의 역량 함양 및 취업 기회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주거의 경우 지역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이나 거주비용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사업일 경우 해당되며, 교육은 자산학 정책이나 진로탐색 지원, 디지털 전환·문제 해결형 교육 관련 정책이, 문화·복지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나 사회에 처음 진입한 청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 활력·참여·성장 영역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청년의 지역 활동 지원 사업이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청년 생활인구 정책의 경우 인구위기 극복 관점에서 청년 유입 확대·유출 대응과 함께 지역 체류청년을 위한 정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영역에 대한 평가 문항은 각 정책 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각 영역별로 5점 척도(관련성 매우 낮음 - 관련성 매우 높음)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경우 ‘자료의 충실성’과 ‘계획수립 및 이행’,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 ‘개선 필요성’의 5개 정량지표와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자는 2023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각 정량 지표에 대하여 7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에 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책사업에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 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만, 정책의 개선 필요성 값의 경우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합산하였다.

〈표 4-6〉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 (최종 안 기준)

평가 항목	세부지표	내용	방법	배점	
사업 영역	일자리·창업	• 청년고용률 상승,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구직기간 단축, 청년창업환경 조성	정량 (5점 척도)	-	
	주거	• 청년 맞춤 주택공급,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교육	• 대학교육혁신, 진로탐색지원, 디지털 전환 및 문제해결형 교육 기회 제공			
	문화·복지	• 청년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회출발청년 및 경제위기 청년 지원			
	활력·참여·성장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청년-지역 동반성장			
	청년 생활인구	• 청년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인구이동(유출) 대응			
청년 정책 사업 평가	자료의 충실성	• 23년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정량 (7점 척도)	40	
	계획수립 및 이행	• 사업 계획수립과 이행이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성과지표 적절성	• 사업의 성과지표(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목표달성	•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개선 필요성	• 해당 사업이 개선될 필요성 여부 (역코딩)	정성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해당 사업에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종합 평가	필요성	• 해당 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지 여부	정량 (7점 척도)	60	
	효과성	• 해당 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인지 여부			
	효율성	•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시간·예산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정책인지 여부			
	지속 필요성	• 부산시 청년정책으로 지속필요성			
	종합의견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해 종합적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정성		

-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경우 6개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1-7점으로 구성
배점: 총점 40점 = 기본점수 5점 + (5문항 * 1-7점)
-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개선 필요성의 경우 역코딩 값을 합산
- 종합평가의 경우 4개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2-14점으로 구성
배점: 총점 60점 = 기본점수 4점 + (4문항 * 1-7점 * 2)

종합평가는 청년정책으로 해당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효율성’, ‘지속 필요성’의 4개 정량지표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 할 수 있는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량평가 문항은 앞선 청년정책 사업평가와

동일하게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의견의 경우 해당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술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책 평가에 적용된 점수 구성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사업평가 40점, 종합평가 6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경우 각 문항의 응답 값을 합산한 뒤, 이후 기본점수 5점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된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사업평가 결과는 최소 1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종합평가의 경우 각 문항의 응답 값에 두 배를 곱하여 합산한 뒤, 이후 기본점수 4점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는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의 점수를 부여받도록 구성하였다.

제5장.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1.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개요

1) 평가 대상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바탕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시범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은 2023년 부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 청년정책 사업들 중 부산시 청년산학국에서 선정한 8개 자체사업이다. <표 5-1>은 시범평가를 진행한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대상사업 목록

사업명	영역	내용
부산청년주간 운영	참여·권리	• 청년이 직접 기획 및 참여하는 청년주체 프로그램으로 청년 이슈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
청년문화 축제 개최	복지·문화	• 청년문화 육성 및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청년 문화축제 개최
청년 자산형성지원	복지·문화	• (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적립금을 지원, 자산형성 기반 조성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일자리	• 면접 시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및 코드를 지원, 청년의 경제적 부담 해소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복지·문화	• 신진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공연 기회 제공
NEXT 10 (청년월드클래스 육성)	교육	• 혁신적 인재 발굴 육성 및 지역 산업연계를 통해 청년 지역 정착과 산업경쟁력 향상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일자리	• 미취업 청년에 취창업 활동비 지원을 통한 사회진입 촉진
청년 신용회복 지원	복지·문화	• 학자금,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에게 저금리 자금지원

자료: 부산광역시 (2024b)

(1) 부산청년주간 운영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부산청년주간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참여·권리 영역으로 구분되는 부산청년주간의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정책라운지, 기타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9월 14일 영화의 전당에서 청년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청년참여 행사, 강연·컨퍼런스,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활동들이 <그림 5-1>와 같이 기획·운영되었다. 특히 2023년 부산청년주간

은 국무조정실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함에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도약하였으나,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하였다.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내 용
◆ 기 념 식			
청년의 날 기념식	9.14.(목) 19:30	영화의 전당	기념식, 퍼포먼스, K-POP 공연
◆ 합동행사			
정부 - 시 합동행사	9.17.(일) 14:00	해운대 구남로	제막식, 부스 라운딩 등
◆ 참여행사			
턱걸이 챌린지	9.17.(일) 15:00	해운대 구남로	유명 유튜버와 시민참여 턱걸이
보이는 라디오 "부산 청년을 보라"	9.18.(월) 16:00	서면 상상마당 앞	청년 고민사연 상담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제안회	9.19.(화) 16:00	청년두드림센터	청년들의 부산시 정책 제안
◆ 강연 컨퍼런스			
엑스포 국제컨퍼런스	9.16.(토) 10:00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글로벌 청년 기후희망 챌린지 발표
청년패널 컨퍼런스	9.18.(월) 14:00	서면 이비스 엠버서더 H	청년 패널조사 관련 발표 및 토론
청년문화포럼	9.18.(월) 14:00	부산청년센터	청년정책 반영을 위한 포럼
◆ 교류·체험			
청년정책라운지	9.14.(목) 13:00	영화의 전당	전국청년정책박람회 (고민상담소, 레드카펫 인터뷰 병행)
청년주간 부스 운영	9.17.(일)-19.(화)	해운대 구남로 (9.17.) 서면 상상마당 앞(9.18.~19.)	청년단체, 체험부스, 정책부스 운영
중앙 청조위·지방청년 청년정책 소통 교류회	9.19.(화) 13:00	청년두드림센터	중앙, 지방청년 정책 제안 및 교류
청년단체 교류회	9.20.(수) 17:00	부산청년센터	청년단체간 교류 및 행사 마무리
◆ 공 연			
부산 청년 버스킹	9.18.(월)-19.(화) 17:00	서면 상상마당 앞	부산 아마추어 청년 버스킹

자료: 부산광역시 (2023a)

〈그림 5-1〉 2023 부산 청년주간 주요 프로그램

(2) 청년문화 축제 개최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복지·문화 영역 정책으로 2023년에는 스트리트 댄스를 활용한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축제 사업인 '2023년 부산 댄스 페스티벌' 사업이 해당한다. 2023년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댄스 페스티벌은 서면 무대에서 공개 진행된 '1:1 댄스 배틀'과 삼정타워 이스포츠 경기장 및 놀이마루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 '댄스 퍼포먼스 챔피언십', 스트리트 댄스 전문 클래스를 운영하는 '스트릿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의 청년문화 홍보 및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1:1 댄스배틀〉



〈댄스 퍼포먼스 챔피언십〉



〈스트릿댄스 클래스〉

자료: 부산광역시 (2023d)

〈그림 5-2〉 2023년 부산 댄스 페스티벌

(3)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적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복지·문화 영역 사업으로 분류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34세 부산 거주 재직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저축액에 1:1로 대응하여 부산시가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과, 사업 참여 청년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으로 구성된다.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선정된 4,000명 중 2023년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는 인원은 3,783명으로 94.58%의 적립금 유지율을 보였으며, 2023년 가입자 중 3,979명이 적립금을 유지하여 99.48%의 적립금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통해 진행되는 금융교육의 경우 1개의 필수 과정과 3개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였다.

〈표 5-2〉 2023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매월 저축액		내용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연5.50%)	720만원 + 이자(연6.00%)
20만원	20만원	720만원 + 이자(연5.00%)	960만원 + 이자(연5.50%)	
30만원	30만원	1,080만원 + 이자(연5.00%)		

자료: 부산경제진흥원 (2024a)

(4)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청년취업 정장대여 서비스 “드림옷장” 지원 사업은 청년이 구직 과정에서 면접 수행 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취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일자리 영역 사업으로 분류되는 정장 대여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입사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함과 동시에 스타일에 대한 코디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총 8,481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6,697명의 청년에게 정장을 대여하여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이후, 지원 업체와 협의를 거쳐 1,784명의 청년에게 무상으로 정장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성과이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아 참여 청년의 99%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0%가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자료: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검색일: 2024.09.23.)

〈그림 5-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운영 체계

(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 상 복지·문화 영역 정책 사업으로 인큐베이팅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신진 청년예술인 경력을 개발,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무용 및 국악 장르의 “수퍼타이거” 작품이, 2023년에는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었으며, 각 작품에 대해 부산시 2억 원이 투입되었다.

2023년 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7억 9천여 만 원(부산시 2억 원, 부산시 문화회관 3억 원, 국비 1억 원, 제작사 1억 원, 기타 911.5만 원)이 투입 되었으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총 12회 공연이 진행되었다. 사업을 통해 총 30명(배우 9명, 연주자 10명, 홍보 3명, 제작 8명)의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총 관객 수는 7,990명을 기록하였다.

구 분	'22년 수퍼타이거	'23년 야구왕, 마린스	비고(증감)
장 르	무용 및 국악	뮤지컬	-
공연일자	'22. 8. 26. ~ 8. 27.(2일간)	'23. 7. 5. ~ 7. 16.(10일간)	8일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공연횟수	2회	12회	10회
사 업 비	200,000천원 (市 2억)	709,115천원 (市 2억 회관 3억 국비 1억 제작사 1억 기타 9,115천원)	509,115천원 (254%)
수 입 금	6,115천원	112,669천원	106,554천원 (1,742%)
수 지 율	3.1%	16%	12.9%
청년예술인	43명 (무용 10, 국악 33)	30명 (배우 9, 연주자 10, 홍보 3, 제작 8)	△13명
청년인건비	50,038천원 (시비 2억 중)	62,780천원 (시비 2억 중)	12,742천원 (25.4%)
관 객 수	1,484명 (유료 313명, 무료 1,171명)	7,990명 (유료 3,779명, 무료 4,211명)	6,506명 (438%)
언론보도	107회 (방송보도 1회)	251회 (방송보도 7회)	144회 (134%)

자료: 부산광역시(2023c)

〈그림 5-4〉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 실적(2023, 2024년)

(6) NEXT 10(청년월드클래스 육성)

2021년 처음 시작된 NEXT 10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사업은 부산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 인재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교육영역으로 분류되는 NEXT 10 사업은 국제 및 전국 대회 수상 실적이 있거나, 다른 대외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모집한 뒤 3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이후 3년 동안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우수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 이후, 분야별 전문가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평가단을 중심으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지원 청년 3인을 선정하여 지원을 진행하였다.

〈표 5-3〉 NEXT 10 사업 역량개발 사업 지원내용 및 성과

선정연도	영역	주요 지원내용 및 성과
2021	사진작가	• 해외 작품활동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 FOTO FEST, Ten by Ten Artist 대상 선정, 휴스턴, 미국
	패션디자인	• 해외 패션위크 참가지원 • K 패션오디션 (대한민국패션대전) 대상 (대통령상) 수상
	창업	• 연구개발 지원 • 미국 CES 및 대만 Meet Taipei 초청
2022	작곡	• 팝페라 공연 개최 지원 앨범 제작 지원 • 미국 국무부 IVLP 선정에 따른 미국 초청 방문
	창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연구개발 지원 • K-camp 부산 우승, K-camp-final 전국 대상
	치기공	•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세미나 개최 지원 • 서울치과기공사협회, 부산가톨릭대학교, 오스템 등 강의 다수
2023	문학작가	• 해외진출 프로그램 개발 해외출간 번역 • 본인 저서 해외진출을 위한 개발 및 기획
	조리	• 쿠킹 클래스 개최 지원 • 쿠킹 클래스 개최 및 특산물 개발
	영화작곡	• 영화음악 믹싱 마스터링 작업 (영화제 출품예정) • 언포게터블 갈라 보조감독 참여

자료: 부산광역시(2024a)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7)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부산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디딤돌 카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의 취업활동 및 사회진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일자리영역으로 분류되는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부산지역 내 미취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포인트(50만 포인트 * 6개월)를 지원하며, 사업기간 동안 당사자가 4개월 이내 조기 취업 할 경우 사회 진입 후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취업 성공금 50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여 청년의 성공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NCS 필기 특강, 취업전략 특강 등 구직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사업 기간 동안 1,000명의 참여자 중 252명이 취업 달성하였으며, 지원 4개월 차 이내 취업에 성공하여 조기 취업 성공금을 지급 받은 참여자는 13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28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수신에

참여 의사를 밝힌 576명을 대상으로 2,898건의 프로그램 홍보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98.2%가 응답 카드가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자료: 부산경제진흥원 (2024b)

〈그림 5-5〉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8)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복지·문화 영역으로 분류 되는 부산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에게 재무관리 상담 서비스 및 신용회복, 연체예방 비용 지원 등 금융 관련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재무상담 및 부채관리 관련 상담이 총 1,027건 이루어졌으며,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 지원이 각각 43건, 159건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총 245건의 비용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용직 노무 관련 정보, 보험, 전/월세 사기 예방법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교육 및 소모임에 608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2023년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 주요 실적

구분		지원 성과	합계
상담	재무상담	198건	1,027건
	긴급생계비	480건	
	채무조정	349건	
비용지원	개인회생	43건 41,185천 원	245건 165명 155,986천 원
	신용회복	43건 35,400천 원	
	긴급생계비	159건 79400천 원	
교육 및 소모임 운영	사이버 교육	470명	608명
	집합 교육	33명	
	이야기 소모임	19명	
	찾아가는 신용강의 및 재무상담	86명	

자료: 부산광역시(2024b)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2) 평가 방법

(1) 평가 절차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는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 정책과에서 제공한 8개 주요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평가는 이메일을 활용한 서면평가의 형태로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열흘 간 진행되었으며, 이후 응답결과에 대한 확인 및 추가 보완 절차를 거쳐 9월 23일 최종적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2) 평가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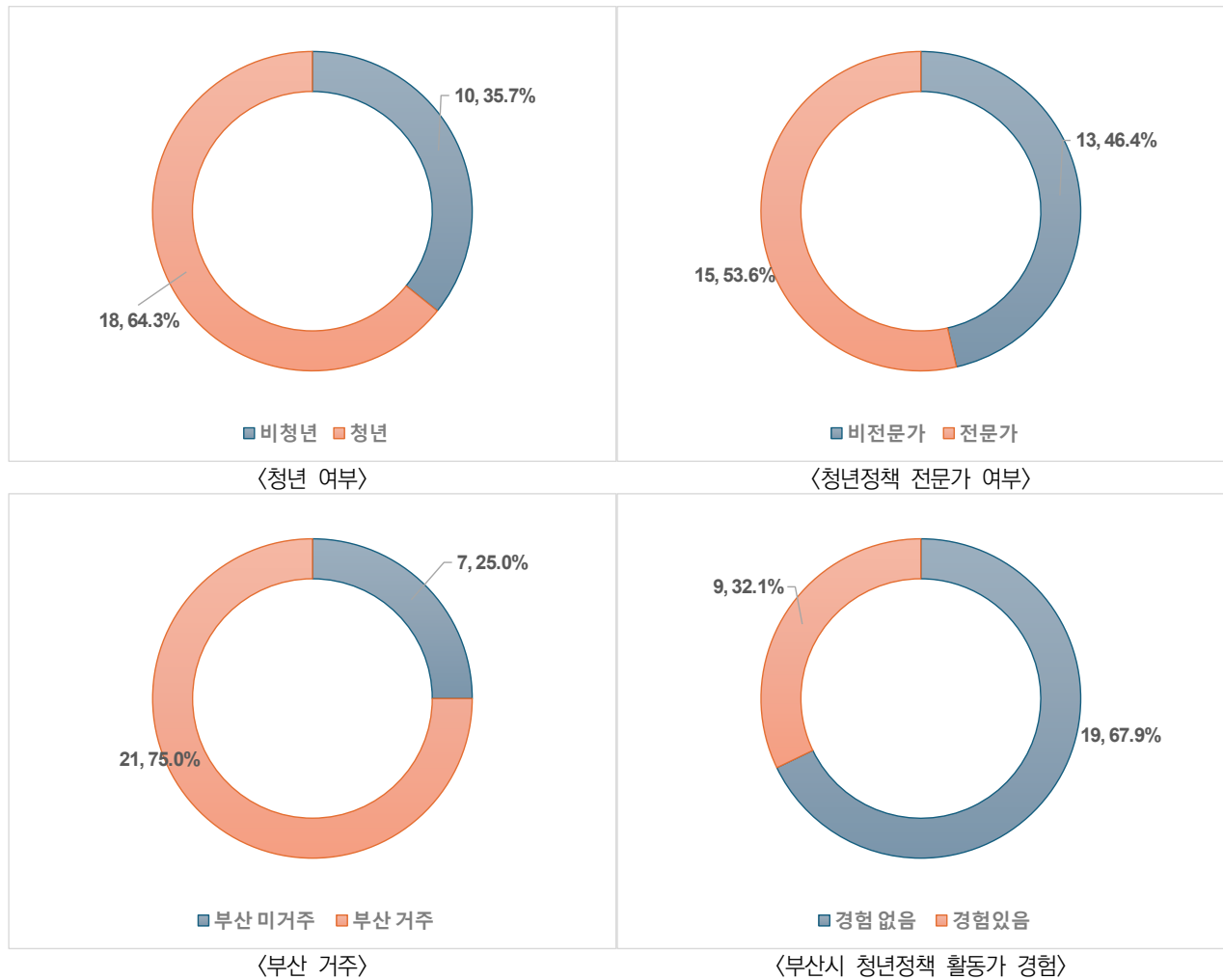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에 참여한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는 다음의 〈표5-5〉와 같이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에서는 주요 영역별 학계 전문가(대학교수)와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정책영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 이외에도 청년활동과 관련이 낮은 일반 청년들을 평가단에 포함시켜 평가 과정에서 지역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5-5〉 부산 청년정책 평가단 구성

이름	소속	전공	청년당사자	청년정책 전문가	부산시 청년활동가	부산거주
강**	○○○○○○○연구소	평생교육	X	○	X	○
강**	○○○○○○○도	청년정책	○	○	X	X
공**	-	화학	○	X	X	○
김**	○○대학교	산업디자인	○	X	X	○
김**	○○연구원	문화	○	○	X	○
김**	-	전기 / 전자공학	○	X	X	○
김**	-	회계	○	X	X	○
김**	-	법학	○	X	X	○
박**	○○○○○○○소	인적자원개발	X	○	X	X
박**	○○대학교	경영 / 물류경영	X	○	○	○
변**	○○연구원	사회복지정책 / 청년	X	○	X	X
서**	○○연구원	경제	X	○	X	○
손**	○○연구원	노동 / 청년정책	X	○	X	○
손**	○○대학교	사회복지	X	○	X	○
신**	○○○○○○○○○연구원	교육학 / 다문화·청년	X	○	X	X
우**	○○청년들	사회학 / 도시사회학	○	X	○	○
윤**	○○○○○	영어교육	○	X	○	○
이**	○○대학교	행정학	○	X	○	○
이**	-	경영학	○	X	X	○
이**	○○○○○○○○○○○	문화예술 / 창업	○	X	○	○
이**	○○대학교	사회학	X	○	X	X
이**	○○○○○○○○○○○	-	○	X	○	○
이**	○○○○○대학교	사회학 / 사회심리학	○	○	X	X
이**	○○대학교	경영/ 가치평가	X	○	○	○
이**	○○○○○○○연구원	경제학 / 소득보장	○	○	X	X
임**	○○○○○○○위원회	노인복지보전 / 청년정책	○	X	○	○
장**	○○연구원	사회복지	○	○	X	○
정**	○○청년들	-	○	X	○	○

다음의 〈그림 5-6〉은 청년정책 평가단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청년여부를 살펴보면 평가단의 64.3%(18명)가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평가단의 53.6%(15명)는 학계나 정책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청년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특성과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단의 75.0%(21명)를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67.9%(19명)를 부산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나 각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정책 활동가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5-6〉 부산 청년정책 평가단 특성

2.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1) 평가결과 기초분석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는 사업 영역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청년정책 사업평가, 종합평가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정책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영역을 분류함과 동시에 총 100점(청년정책 사업평가 40점 + 종합평가 60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 5-6>은 정책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6>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사업별 평가)

순번	정책사업 구분	청년정책 사업평가		종합평가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청년정책 A사업	26.61	5.24	36.86	12.25	63.46	15.84
2	청년정책 B사업	32.07	3.86	52.00	5.94	84.07	8.97
3	청년정책 C사업	28.75	5.15	49.93	11.18	74.68	15.0
4	청년정책 D사업	22.75	7.34	35.07	13.05	57.82	19.17
5	청년정책 E사업	24.96	6.93	38.57	12.96	63.54	18.83
6	청년정책 F사업	32.79	3.90	51.64	8.17	84.43	10.66
7	청년정책 G사업	25.21	5.64	45.21	8.3	70.43	11.16
8	청년정책 H사업	30.71	5.32	50.71	7.97	81.43	11.6

-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경우 6개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1-7점으로 구성
배점: 총점 40점 = 기본점수 5점 + (5문항 * 1-7점)
-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개선 필요성의 경우 역코딩 값을 합산
- 종합평가의 경우 4개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2-14점으로 구성
배점: 총점 60점 = 기본점수 4점 + (4문항 * 1-7점 * 2)

먼저 청년정책 사업평가를 살펴보면 ‘청년정책 F사업’이 32.7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로 ‘청년정책 B사업’ 32.07점, ‘청년정책 H사업’ 30.71점, ‘청년정책 C사업’ 28.75점, ‘청년정책 A사업’ 사업 26.61점, ‘청년정책 G사업’ 사업 25.21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정책 D사업’의 경우 22.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청년정책 E사업’사업 역시 24.96점으로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기록하였다.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청년정책 B사업’이 5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청년정책 F사업’이 51.64점, 청년정책 H사업’ 50.71점, ‘청년정책 C사업’ 49.93점, ‘청년정책 G사업’ 45.21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정책 사업평가와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D사업’이 35.0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청년정책 A사업’은 36.86점, ‘청년정책 E사업’은 38.57점을 기록하여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기록하였다.

청년정책 사업평가와 종합평가를 합산한 최종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84.43점의 ‘청년정책 F사업’이었으며, 이후 ‘청년정책 B사업’ 84.07점, ‘청년정책 H사업’ 81.43점, ‘청년정책 C사업’ 74.68점, ‘청년정책 G사업’ 70.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정책 A사업’과 ‘청년정책 E사업’은 각각 63.54점과 63.46점으로 타 사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년정책 D사업’ 사업은 57.82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5-7〉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영역별 평가)

영역 구분	청년정책 사업평가		종합평가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복지·문화	26.66	4.61	42.29	6.64	68.95	10.38
참여·권리	28.75	5.15	49.93	11.18	74.68	15.0
교육	24.96	6.93	38.57	12.96	63.54	18.83
일자리	31.75	3.54	51.18	5.72	82.93	8.08

〈표 5-7〉은 주요 영역별 시범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영역 정책의 평가가 82.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참여·권리 74.68점, 복지·문화 68.95점, 교육 63.54점 순으로 나타나 정책 영역별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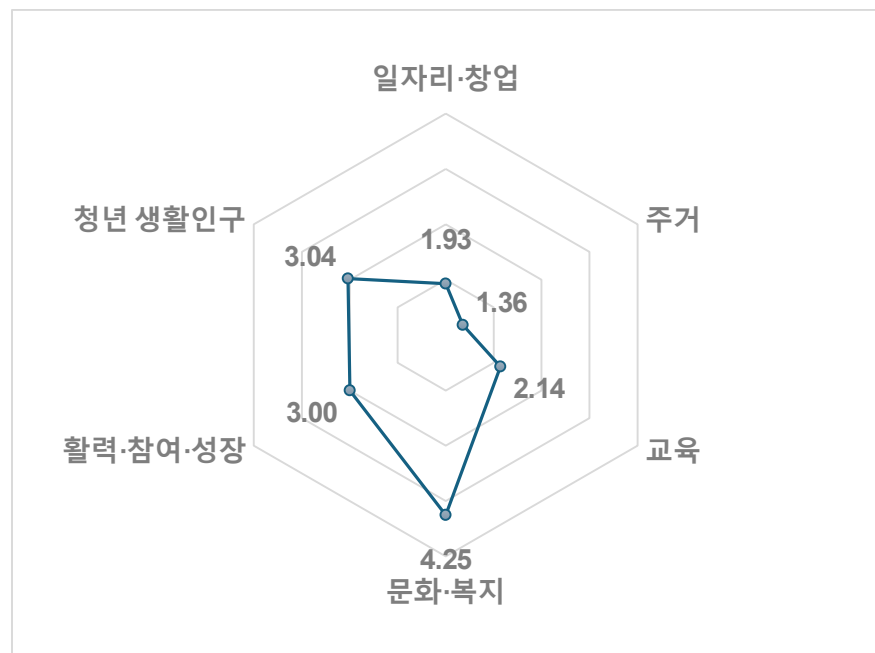
영역별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경우 일자리 영역의 사업이 31.7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권리 영역이 28.75, 복지·문화 26.66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영역은 24.96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평가 결과 역시 동일하기 일자리 영역의 정책 사업들이 51.1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참여·권리 49.93, 복지·문화 42.29 교육 38.57 순으로 나타났다.

2) 정책 사업 별 평가 결과

(1) 청년정책 A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7〉은 청년정책 A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A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문화·복지(4.25) 영역과 부합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년정책 A사업 진행을 통해 생활인구(3.04) 및 활력·참여·성장(3.00)영역에도 일정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5-7〉 청년정책 A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8〉은 청년정책 A사업 평가 결과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5.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충실성 역시 5.32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4.0을 목표 달성은 4.46으로 보통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표 5-8〉 청년정책 A사업 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5.25	1.24	2	7
계획 수립 및 이행	5.32	1.28	2	7
성과지표 적절성	4.0	1.65	1	7
목표 달성	4.46	1.43	1	7
개선 필요성	2.57	1.18	1	6

반면 개선 필요성의 경우 2.57점으로 정책사업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5-9〉는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행사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뒤를 이었다. 또한 정책의 특성으로 수혜 대상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의견 역시 존재하였다. 소수 의견으로는 사업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나, 사업 홍보 방안, 사업 진행 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

〈표 5-9〉 청년정책 A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함 • 행사의 내용적 측면 보완 필요(타 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필요 •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 필요 • 정책 수혜대상에 대한 설정 고민이 필요 • 청년문화 사업 및 참여자에 대한 지속성 확보가 필요 • 타 지역 및 부산 청년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질적 재고가 필요 • 축제 진행 시 돌발 상황(기상악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및 참여를 독려

③ 종합평가

〈표 5-10〉은 청년정책 A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4.43점을 기록하여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며, 효과성(4.14)과 목표 달성(4.11) 역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3.75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표 5-10〉 청년정책 A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4.43	1.66	1	7
효과성	4.14	1.55	1	7
성과지표 적절성	3.75	1.64	1	7
목표 달성	4.11	1.70	1	7

다음의 〈표 5-11〉은 청년정책 A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1〉 청년정책 A사업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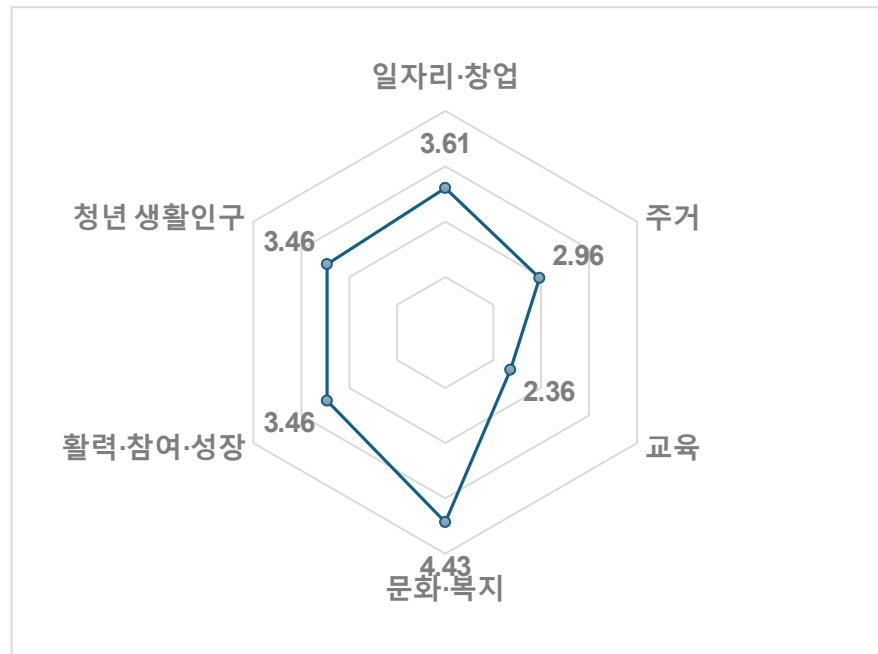
내용
• 청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임 • 행사 전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러 측면의 검토 및 고려사항들을 확인한 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분석을 통한 정책소통 측면을 고려한 점 등이 우수 •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설계부터 실행, 환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부산 청년의 참여가 확대 보장되길 바람 •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특색(스토리)이 필요하며, 전국적 규모의 관람 콘텐츠 이슈화라고 하기엔 유튜브 조회수가 부족함 • 청년 사업과 일반 문화행사와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으며, 문화행사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청년 = 춤과 노래 = 행사'라는 단선적 논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므로 사업의 특징, 주요성과, 개선사항에서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임 • '댄스/비보잉' 장르 집중보다, 해당 카테고리 전체를 포함하는 '인디/힙합 등'의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페스티벌 형태로의 확대를 기대 함 • 퍼포먼스 진행 이후에도 청년 예술인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날이나 다른 문화 축제와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은 청년들을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 • 다양한 장소 섭외, 무대 설치, 상금 집행, 인력비 등에 따른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관 행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필요

(2) 청년정책 B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8〉은 청년정책 B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B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문화·복지(4.43) 영역과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청년정책 B사업은 일자리·창업(3.61) 영역과 청년 생활인구(3.46), 활력·참여·성장(3.46)영역과도 일정부분 이상

연관성을 보인다고 평가되어, 부산시 청년정책 전반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8〉 청년정책 B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12〉은 청년정책 B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6.14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충실성 역시 6.11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5.54를 목표 달성은 5.68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청년정책 B사업 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6.14	0.69	5	7
계획 수립 및 이행	6.11	0.62	5	7
성과지표 적절성	5.54	1.27	2	7
목표 달성	5.68	0.89	4	7
개선 필요성	3.61	1.32	1	6

한편 사업 개선 필요성의 경우 3.61점으로 정책사업의 개선 여지가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5-13>은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3〉 청년정책 B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소득 불안정 청년의 자산형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한 청년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약정기간 이후 수령액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 필요 • 고용노동부 및 부산시의 타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 필요 • 임신/출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막고, 참여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이벤트(첫 주택구매, 혼인, 출산 등) 발생 가능성 높음. 긴급한 목돈 필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선택지 보강 필요 (특정 사유에 한해 특별해지요건 혹은 중도인출 등) • 부산청년 기쁨두배 사업의 일정 금액(예: 전체 사업비의 약 30~40%)을 일자리미스매치가 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함 •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만기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택지 보강 필요 • 예금 만기 이후 자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및 지역 내 학교들과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를 고려 •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의 문제나 복잡한 절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기존 다수의 사업이 중소기업 재직, 4대보험 가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다보니, 임시직의 경우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불가능한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기간 산정 시 군복무에 대한 부분 고려가 필요 • 사업 참가자 모집~공고기간 중 현재 인원으로 1인당 1일 약 122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콜센터 상담 인력 인원 총원이 필요

③ 종합평가

<표 5-14>는 청년정책 B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6.29점을 기록하여 평가단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효과성 역시 6.0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지표의 적절성의 경우 5.46점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목표 달성은 6.1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표 5-14〉 청년정책 B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6.29	0.70	5	7
효과성	6.07	0.88	4	7
성과지표 적절성	5.46	1.02	3	7
목표 달성	6.18	0.97	4	7

다음의 <표 5-15>는 청년정책 B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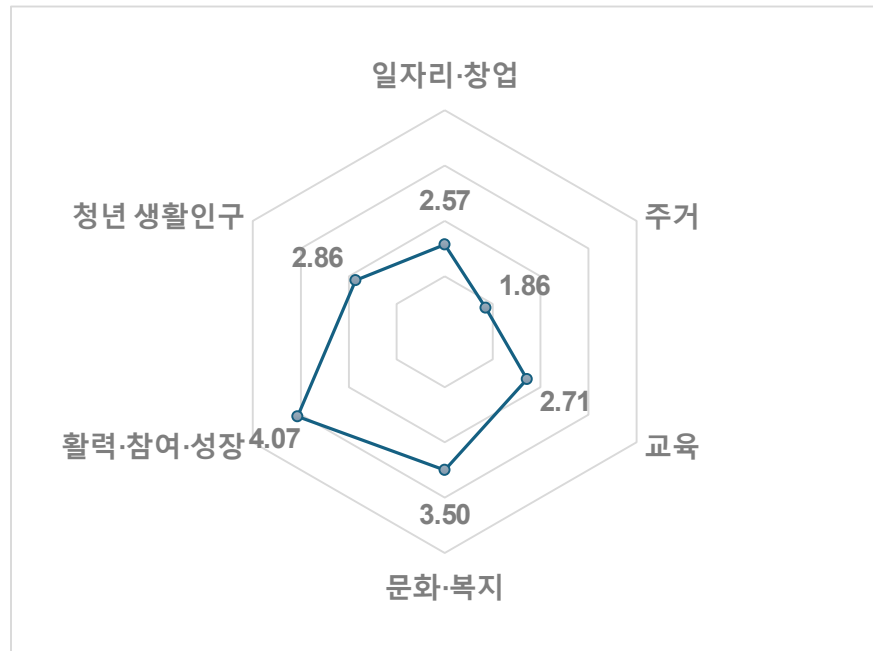
〈표 5-15〉 청년정책 B사업 종합의견

내용
•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우수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 지속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장려 뿐 아니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필수로 둔 점이 우수한 지점임 • SNS, 역사 내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PDP, 퀴즈 이벤트 등 홍보 및 광고 방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과 서류 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의 상태(정규직, 임시직, 취업준비청년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방법을 달리하는 정책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자산형성을 돕고, 지역 내 청년의 정주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청년들의 근본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보다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에 그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프로그램 종료 후 청년들의 자립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 및 개선과정이 필요 •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 • 청년들이 유지에서 만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 • 만기 이후 청년들이 목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만기 이후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중앙부처 유사 사업과의 조율은 필요함 • 프로그램 신청인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 또는 철폐 시키고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최소 약정금액인 10만원이 청년들에게는 많을 수 있음. 약정금액을 5만원/12개월 적립구간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금융교육 지원시점을 약정기간 내가 아닌 지원 전 사전이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참여도와 지속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지원되는 금융적인 정책이 다양하지 않고 정책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과거에 비해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 되었지만, 신청기간이 7월인 것을 감안하며 추가적 기간 단축이나 일정 조정의 필요가 있음 • 사회초년생의 관심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으로 일경험을 쌓는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 형태 참여자가 빈약함 • 저축금액이 소액이라 청년들이 부담 없이 가입하여 적금 유지율이 높긴 하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 대상인원 확대 및 지원대상의 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3) 청년정책 C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9〉는 청년정책 C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C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활력·참여·성장 영역(4.25)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외에도 문화·복지(3.50)영역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9〉 청년정책 C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16〉은 청년정책 C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5.64점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충실성 5.25점, 목표 달성 5.11점으로 사업 계획 및 수립 및 이행과정과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이 비교적 충실하게 진행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성과지표의 적절성의 경우에는 4.79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표 5-16〉 청년정책 C사업 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5.64	1.01	3	7
계획 수립 및 이행	5.25	1.15	2	7
성과지표 적절성	4.79	1.59	1	7
목표 달성	5.11	1.26	1	7
개선 필요성	2.96	1.59	1	7

반면 사업 개선 필요성의 경우 2.96점으로 정책사업 개선에 대한 평가자들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5-17〉은 청년정책 C사업에 대해 청년정책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7〉 청년정책 C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청년주간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게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청년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개별 정책의 목적 및 목표가 불명확함 •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과도하게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홍보 차원에 그치는 경향이 존재 • 부산시 및 부산 청년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 • 사전운영계획에 청년의 기획과 프로그램운영방식, 개최장소에 대하여 청년의 의견을 보다 확대 청취할 필요가 있음 • 행사 참여자 및 방문자에 비해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가 적어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응답자 수 확대 필요 • 결과보고서에 제기된 대다수 프로그램들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수립 및 목표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임 • 부산의 특성, 부산의 청년의 연결점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활동이 진행되어야 함. • 날씨와 같은 환경적 요인 고려한 운영 계획수립이 미흡 • 부산시민공원, 부산역 뒤편 등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구역별로 진행하지 않고, 한 곳에서 진행했다면 다양한 부스를 즐기기에 용이했을 것임 • 청년들의 정책 참여, 부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 확충 필요

③ 종합평가

〈표 5-18〉은 청년정책 C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5.57점을, 효과성의 경우 5.39점을 기록하여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 역시 5.64점으로 정책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적절성의 경우 4.36점을 기록하여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표 5-18〉 청년정책 C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5.57	1.40	1	7
효과성	5.39	1.47	1	7
성과지표 적절성	4.36	1.74	1	7
목표 달성	5.64	1.54	1	7

다음의 〈표 5-19〉는 청년정책 C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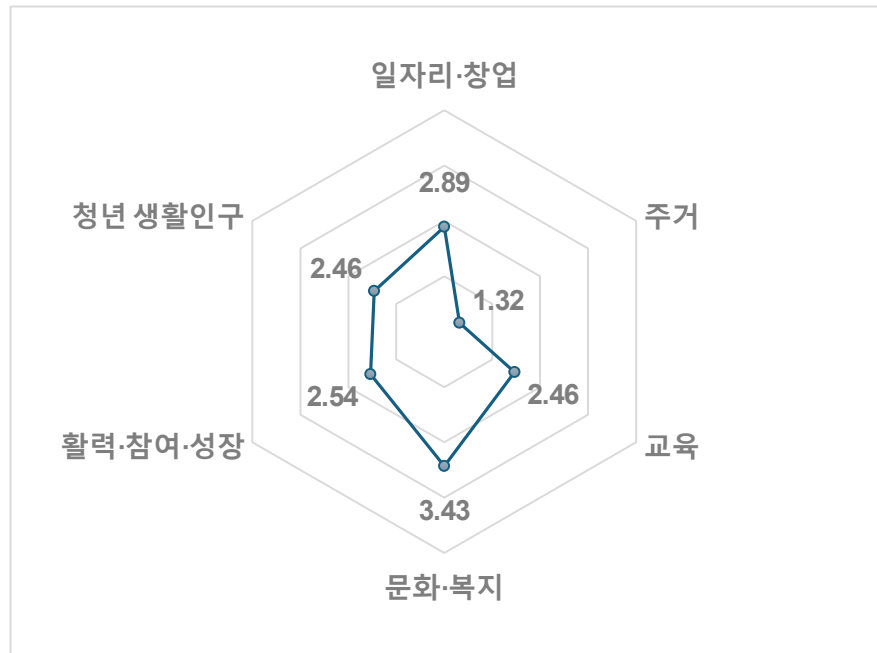
〈표 5-19〉 청년정책 C사업 종합의견

내용
• 청년기본법 상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청년주간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정책홍보, 청년의견 수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필요성이 높음 • 청년주간 부스, 버스킹 행사 등을 통해 부산의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진로와 취향 탐색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와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지역 내 청년(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효율성만으로는 의미를 측정할 수 없음 • 현행 기획에서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직접 기획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선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함 • 청년주간 기획에 청년 참여가 환류 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함 • 부산시의 청년정책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청년주간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임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서면, 해운대 이외 명지, 하단, 영도, 남포, 부산진, 덕천, 사직 등 여러 청년밀집지역에서 청년주간 행사가 개최되기를 바람 • 해당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주간이지만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외적 행사로 구성이 되었음 • 청년주간 방문 동기의 다수가 취미, 여가 중심(51%)으로 맞춰져 있으며, 정책, 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31%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주간 본연의 기획의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산시 청년정책 홍보와 소통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교육 콘텐츠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해야 함

(4) 청년정책 D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10〉은 청년정책 D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D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문화·복지(3.43) 영역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타 사업에 비해 정책영역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류되었으며, 타 영역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5-10〉 청년정책 D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20〉은 청년정책 D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3.43점으로 평가에서 활용된 결과보고서 자료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역시 3.64점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계획 수립 및 이행도는 4.00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표 5-20〉 청년정책 D사업 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3.43	1.76	1	7
계획 수립 및 이행	4.00	1.85	1	7
성과지표 적절성	3.64	1.82	1	7
목표 달성	3.64	1.87	1	7
개선 필요성	3.04	1.68	1	7

사업의 개선 필요성 역시 3.04점으로 정책사업 개선에 대한 평가자들의 요구가 높았다. 다음의 〈표 5-21〉은 청년정책 D사업에 대해 청년정책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21〉 청년정책 D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해당 사업은 일자리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청년 생활인구 등 기본계획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진행과정 등의 정책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단순한 활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와 참여자의 피드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사업의 이름과 달리 품평회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의 개선보다는 폐지하거나 기존 지원사업 내 단위 활동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청년보다 아역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부산청년예술가들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와는 상관없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음 • 신진예술인 인큐베이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유명인의 관람, 배우로의 1회성 참여가 전문예술인으로서의 경력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어려움 • 콘텐츠 선정 시 지역 청년예술인 참여가 가능한 작품으로의 선정이 필요

③ 종합평가

〈표 5-22〉는 청년정책 D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4.21점으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며, 정책의 효과성(3.96) 및 목표 달성(4.00) 역시 보통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3.36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표 5-22〉 청년정책 D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4.21	1.68	1	7
효과성	3.96	1.72	1	7
성과지표 적절성	3.36	1.63	1	7
목표 달성	4.00	1.95	1	7

다음의 〈표 5-23〉은 청년정책 D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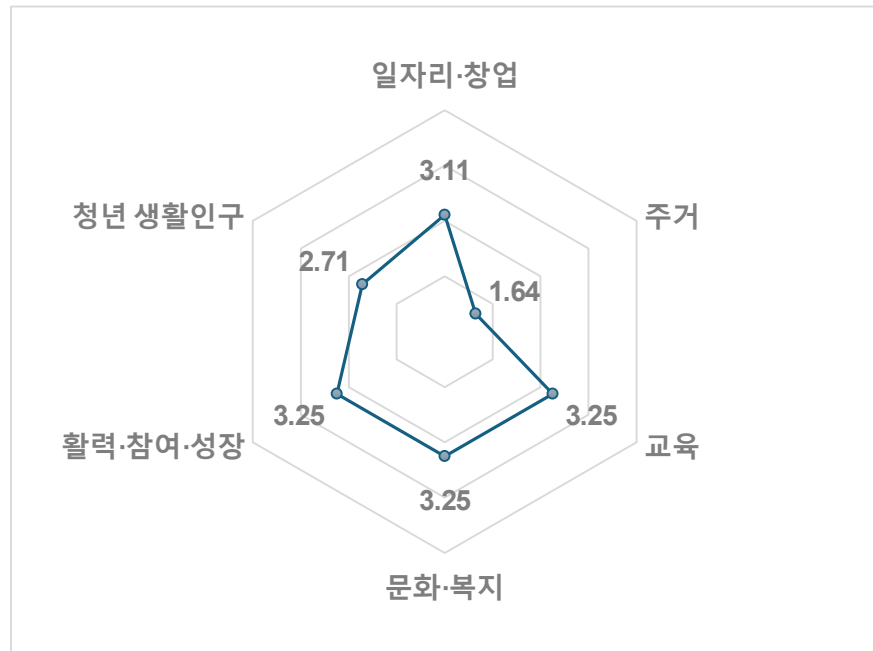
〈표 5-23〉 청년정책 D사업 종합의견

내용
• 향후 작품 보완 및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무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년예술진흥정책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을 듯함 • 사업 품평회 결과보고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작품에 참여하는 형태의 단순 창작 지원을 통해서도 청년예술인들의 역량강화에 한계가 존재 • 야구왕 마린스는 부산의 문화 콘텐츠로서 우수한 기획인 것 같으나, 청년정책으로는 적합성이 떨어짐 • 신진청년예술인에게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우수하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작아 참여자 확대를 통한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됨 • 부산 지역 내 뮤지컬 학과 등과 연계하여 청년 및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 대비 공연횟수, 수입금, 관객수의 효율이 높아 재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청년 예술인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창작 공간(작업실, 전시공간, 공연장 등)과 네트워크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제작사를 통한 예술활동 지원이 아니라 예술인에 대한 직접적 창작 활동 지원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창작물은 부산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무료 공연 방식으로 제공하여 다수 시민의 예술 경험을 증대할 필요 있음 • 해당 정책의 수요 및 수혜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며, 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품질 개선과 흥행을 위주로 개선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아, 질 좋은 예술작품을 공공의 합작으로 잘 만들고, 흥행시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소수의 신진예술인들이 고용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임 • 해당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신진예술인 고용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부산청년문화패스, 국가청년문화예술패스와 연계하여 뮤지컬로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

(5) 청년정책 E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11〉는 청년정책 E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E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활력·참여·성장, 문화·복지, 교육 영역에 각각 3.2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일자리·창업 영역 역시 3.11점의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청년정책 E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의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있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1〉 청년정책 E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24〉는 청년정책 E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3.96점을 기록하였으며, 계획 수립 및 이행 4.54점, 성과지표 적절성 4.11점, 목표 달성 4.11점을 기록하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정책 E사업의 경우 모든 평가 영역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청년정책 E사업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3.96	1.68	1	7
계획 수립 및 이행	4.54	1.50	1	7
성과지표 적절성	4.11	1.70	1	7
목표 달성	4.11	1.63	1	7
개선 필요성	3.25	1.57	1	7

사업의 개선 필요성은 3.25점으로 정책사업 개선에 대한 평가자들의 요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5-25〉은 청년정책 E사업 사업에 대해 청년정책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25〉 청년정책 E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사업 결과보고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성과지표(목표), 추진실적, 목표 달성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연령대 및 대상 분야 확대와 기업 매칭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 기간 확보 등 고려 • 단순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금전 지원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월드클래스 도약을 위한 소수 인재 육성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확고하고 투명한 선발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사업 지속 시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 • 정책사업의 의미는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선발, 보조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공영역의 지원 정책인 만큼 체육·문화 영역 이외에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및 기회보장이 필요할 것임 • 10년 개발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과는 달리 앞으로 10년 개발 육성계획에 목표 및 비전이 부재한 상황이며, 지원 대상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큰 만큼 해당 수혜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환원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 • 효과성 측면에서 소수의 인원에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일반 청년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른 지원 방법을 추가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과 성과 측면 모두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③ 종합평가

〈표 5-26〉은 청년정책 E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4.54점으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며, 정책의 효과성 4.32점, 성과지표 적절성 3.96점, 목표 달성 4.46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표 5-26〉 청년정책 E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4.54	1.68	1	7
효과성	4.32	1.65	1	7
성과지표 적절성	3.96	1.72	1	7
목표 달성	4.46	1.70	1	7

다음의 〈표 5-27〉은 청년정책 E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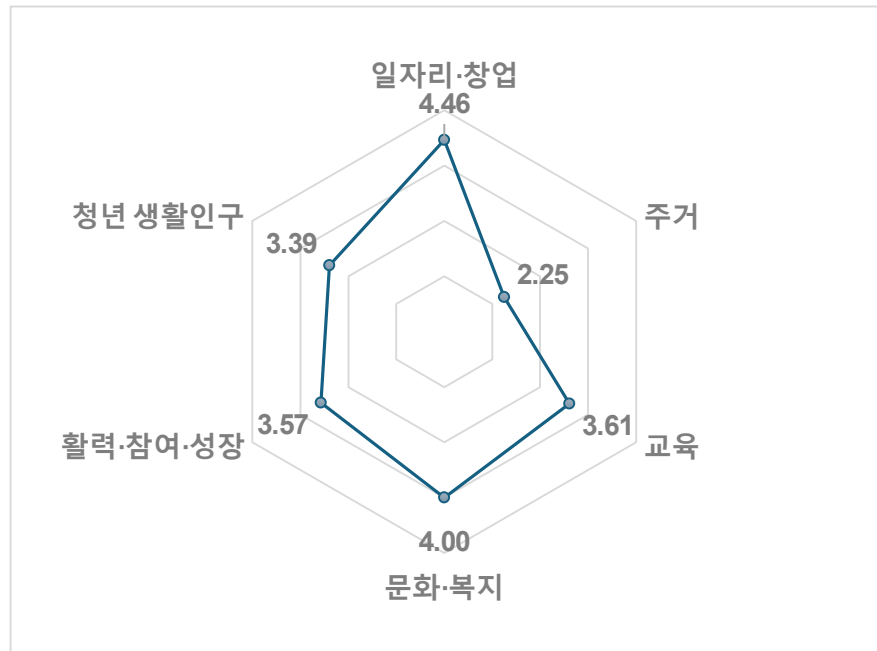
〈표 5-27〉 청년정책 E사업 종합의견

내용
• 숨은 인재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는 의의가 있는 사업임 • 소수의 인원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부산시의 청년정책 목표를 단기간 내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함으로 필요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성공 사례를 통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지속 필요성은 높음 •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과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연령대의 확대 필요 • 결과보고에 대해 보강 필요. 현재 수준의 자료로는 사업 내용 파악이 어려움 • 사업이 지속됨을 고려 시, 사업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월드클래스 육성정책도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지만, 부산지역 청년들의 보편지원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됨 • 해당 인재들이 서로 교류하고, 자신의 경험을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교육 및 멘토링, 자신들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등 종합적 과정이 설계되어야 함 • 월드클래스 기존 유형 3개(전문가, 문화예술, 이슈리더)를 나누되 모집공고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분야를 열거하여 청년들이 지원가능한 자격과 분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산에 돌아오는 엘리트에 대한 지원,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해당 영역의 확산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부산출신 인재가 아니라 부산에서 활동하는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재에 대한 기회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인 '인재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정 청년의 이후 활동 내용에서 '부산시'의 지원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한 '멘토링'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이 부족하며, 선정 청년이 부산 청년에게 자신의 역량을 전달하고, 부산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적극적 멘토링 프로그램 추가가 필요 • 평가지표로는 열정 및 도전정신, 목적의식, 우수성이 구성되어있으나,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추상성이 강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정책 F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12〉는 청년정책 F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F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일자리·창업 영역(4.46)에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외에도 사업 진행을 통해 문화·복지(4.00)영역에도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3.61), 활력·참여·성장(3.57), 청년 생활인구(3.39)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청년정책 F사업이 주거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12〉 청년정책 F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28〉은 청년정책 F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6.3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충실성 역시 6.21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5.82를 목표 달성은 5.75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청년정책 F사업 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6.36	0.81	5	7
계획 수립 및 이행	6.21	0.72	5	7
성과지표 적절성	5.82	1.00	3	7
목표 달성	5.75	1.21	2	7
개선 필요성	3.64	1.37	1	7

한편 사업 개선 필요성의 경우 3.64점으로 정책사업의 개선 여지가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5-29〉는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29〉 청년정책 F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향후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지원금 축소는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 횟수를 늘림과 동시에, 본 사업을 청년정책 게이트웨이로 활용해 정책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및 부산시에 유사사업이 존재하므로 중복성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업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취업률 등)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사후관리에 방안 역시 필요함 • 단순히 지원금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및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 종합 케어 체계를 갖추어 청년의 정착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 미집행 반납금액(사회진입활동비)이 다소 많으므로 관리 필요함 • 부산거주기간이 길수록 선정에 유리하도록 거주기간별 점수를 달리하거나, 부산지역에 취업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생활인구 유입 확대의 측면에서 볼 때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의 양보다 질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해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 향후 연령에 따른 지원자격 확대와 지원금 축소가 진행될 경우 사업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역량 강화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ex: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중심의 역량을 강화 교육 프로그램) • 청년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은 바람직해보이나 낮은 취업 성공률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사후적으로 지원받은 청년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역정주, 취업, 결혼 등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

③ 종합평가

〈표 5-30〉은 청년정책 F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의 살펴보면 정책의 필요성은 6.36점, 효과성의 경우 5.89점을 기록하여 정책의 필요 및 효과성에 대해 평가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5.46점, 목표 달성 6.11점으로 정책의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이 잘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30〉 청년정책 F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6.36	0.72	5	7
효과성	5.89	1.21	1	7
성과지표 적절성	5.46	1.30	1	7
목표 달성	6.11	1.26	1	7

다음의 〈표 5-31〉은 청년정책 F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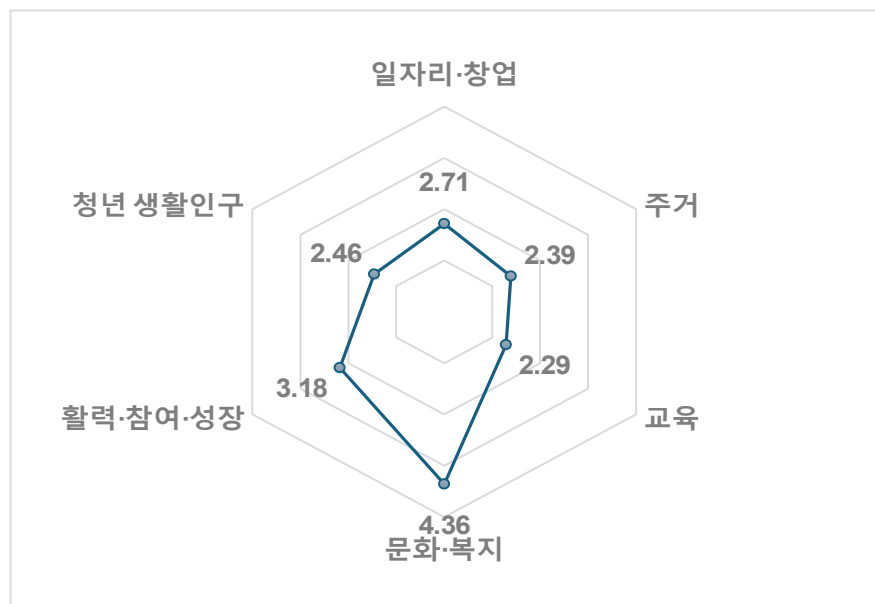
〈표 5-31〉 청년정책 F사업 종합의견

내용
• 청년층에게 가장 널리 선호될 정책사업으로 구직활동과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청년-지역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임 • 청년 사회진입활동 및 정착을 위해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며, 결과보고서 내용이 충실하고 목표 달성도도 높음 •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일정기간 이어져 사회진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사회초출발 및 일자리와 관련한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사업대상자선정에 있어 누진적 설계 및 구체적인 선정 방법 제시, 조기 취업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청년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 반영 노력 등이 우수하다 판단됨 •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가정의 형편이나 소득보다 본인의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음 • 디딤돌 카드를 통한 자금 지원 외에, 구직자들 간의 소모임(스터디 등) 운영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연계하여, 취업기간동안 소속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참여 청년이 디딤돌 카드를 통해 어떤 직군의 역량을 쌓는 지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함 • 디딤돌카드 이용자 중 조기 취업자에게 부산청년기쁨2배통장 등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추가 지원을 고려

(7) 청년정책 G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13〉은 청년정책 G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G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문화·복지 영역(4.36)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외에도 활력·참여·성장(3.18)영역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3〉 청년정책 G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32〉는 청년정책 G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3.89점을 기록하였으며, 계획 수립 및 이행 4.36점, 성과지표 적절성 4.00점, 목표 달성 4.50점을 기록하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정책 G사업의 경우 모든 평가 영역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청년정책 G사업 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3.89	1.47	2	7
계획 수립 및 이행	4.36	1.47	2	7
성과지표 적절성	4.00	1.46	2	7
목표 달성	4.50	1.27	2	7
개선 필요성	3.46	1.09	2	7

한편 사업의 개선 필요성은 3.46점으로 정책사업 개선에 대한 평가자들의 요구가 조금 나타났다. 다음의 〈표 5-33〉은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33〉 청년정책 G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현재의 사업 결과보고서는 단순 운영결과 위주로 작성되어 사업이 목표에 맞게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개인 부채 등 금융위기 청년들에 대한 비용지원 및 재무상담에 대한 목적, 계획, 이행, 그리고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경기불황, 채무증가 등으로 경제위기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지원 방식이외에 재무 관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채상담 및 이야기소모임(서포트그룹) 지원 시 정신건강 상담가나 소모임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면 위기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신용회복 상담 사업은 주로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나 사업이 단기적 재정 문제 해결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무계획에도 초점을 맞춰 청년들의 근본적인 소득 문제나 재정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성과 목표의 경우 상담건수와 상담만족도,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건수 등을 목표로 잡고, 상담수 이외에도 만족도를 높이거나 지원 연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담 등의 인력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금융회복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연체해소 지원금에 사용되는 예산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임. • 인건비 및 행사홍보비 등의 예산 항목이 전체 예산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판단 됨 • 전세사기피해청년과 같이 긴급하고 직접적인 피해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제공이 필요하나, 별도의 지원팀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신용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부채가 생긴 것인지 회복이후의 삶에 대한 재무교육과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사이버 교육 이외에 오프라인 교육과 소모임 인원의 확대, 청년 맞춤형 교육 및 이야기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 지원 이외에 사회적·관계적 회복을 지원해야 함

③ 종합평가

〈표 5-34〉는 청년정책 G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의 살펴보면 정책의 필요성은 5.43점, 효과성의 경우 5.18점을 기록하여 정책의 필요 및 효과성에 대해 평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목표 달성 역시 5.39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나, 성과지표의 적절성의 경우 4.6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받고 있었다.

〈표 5-34〉 청년정책 G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5.43	1.15	2	7
효과성	5.18	1.23	2	7
성과지표 적절성	4.61	1.14	2	7
목표 달성	5.39	1.14	3	7

다음의 〈표 5-35〉는 청년정책 G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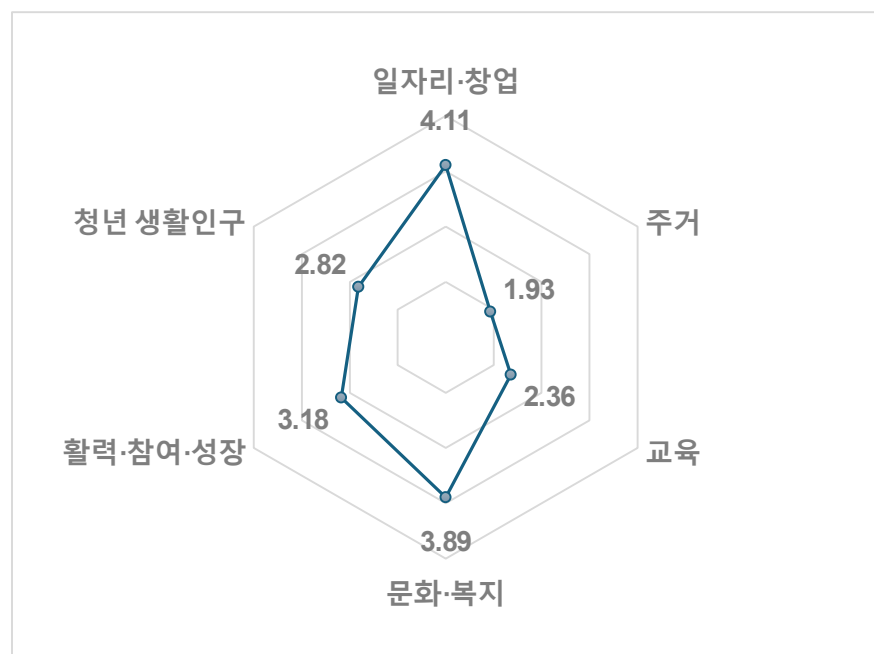
〈표 5-35〉 청년정책 G사업 종합의견

내용
• 전세사기, 도박중독, 기타 신용문제는 현대사회 청년들의 경제자립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업임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산시 청년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나, 회복능력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높음 • 직접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 취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개선 및 재무 관리 방안 교육 필요 •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지원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자격에서 제한된 대상 또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집단으로부터 불공정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서에서 지원 조건이나 정책집행 과정의 절차 등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임(46%) • 시급한 문제가 지역 내 발생했을 경우 금융과 기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청년의 신용 문제가 소액 대출/생활비 대출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 문제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체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소모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 • 부채를 탕감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초기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탕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을 고려

(8) 청년정책 H사업

① 사업영역

〈그림 5-14〉는 청년정책 H사업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H사업은 6대 부산시 청년정책 사업 영역 중 일자리·창업 영역(4.11)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외에도 문화·복지(3.89) 및 활력·참여·성장(3.18)영역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4〉 청년정책 H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② 청년정책 사업평가

〈표 5-36〉은 청년정책 H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료의 충실성을 살펴보면 5.18점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충실성 5.39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5.21점, 목표달성 5.54점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 5-36〉 청년정책 H사업 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의 충실성	5.18	1.10	3	7
계획 수립 및 이행	5.39	1.35	2	7
성과지표 적절성	5.21	1.35	2	7
목표 달성	5.54	1.18	2	7
개선 필요성	4.39	1.29	2	7

사업 개선 필요성 역시 4.39점으로 타 정책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표 5-37〉은 평가단이 지적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37〉 청년정책 H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내용
• 다수의 청년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다른 청년 사업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중간점검 활동을 통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지원 대상 조건(연령) 관련 군복무 기간 가산 뿐 아니라 최근 청년들의 늦어진 노동시장 진입을 고려 시 연령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제주의 경우 정장을 직접 보유하여 대여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청년센터와 연결 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중 • 성별 이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이후 사업에 반영이 필요함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방법을 고려 •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나 정장관리나 코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부산 거주 청년 이외에 부산으로 취업면접을 보러 오는 타지의 청년들에게 확대한다면 부산 유입인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장대여 이외에 필요시 헤어 메이크업 등 면접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③ 종합평가

〈표 5-38〉은 청년정책 H사업의 종합평가를 주요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의 살펴보면 정책의 필요성은 5.89점, 효과성의 경우 5.71점을 기록하여 정책의 필요 및 효과성에 대해 평가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5.71점, 목표 달성 6.04점으로 정책의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이 잘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38〉 청년정책 H사업 종합평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요성	5.89	0.94	4	7
효과성	5.71	1.03	3	7
성과지표 적절성	5.71	1.13	3	7
목표 달성	6.04	1.09	3	7

다음의 〈표 5-39〉는 청년정책 H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5-39〉 청년정책 H사업 사업 종합의견

내용
• 취업대상자에 대한 정장지원으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나는 유익한 사업으로, 목표 지원 인원을 넘어선 인원에게 참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가지원 함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 인상적임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지역 청년구직자들이 다수 인지하고 있으며, 청년의 비용 절감 및 취업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확대가 필요한 사업임 • 지원 대상 조건(연령) 관련하여 최근 청년들의 늦어진 노동시장 진입을 고려하면 연령기준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순 대여를 넘어 어떻게 해당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청년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필요 • 자원순환, ESG 등 가치를 결합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일경험 플랫폼을 통해 면접 신청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정장을 대여 및 배달해주는 서비스나, 취업사진, 미용 서비스와 연계하게 되면 해당 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3) 지표별 평가결과 종합 (1) 주요 사업별 영역

다음 〈표 5-40〉은 시범평가 대상사업의 정책영역 분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사업들의 경우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책영역의 분류와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정책 D사업’ 사업의 경우 문화·복지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청년정책 E사업’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영역 모두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정책영역 분류결과 종합

정책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청년 생활인구	핵심영역
A	1.93	1.36	2.14	4.25	3.00	3.04	문화·복지
B	3.61	2.96	2.36	4.43	3.46	3.46	문화·복지
C	2.57	1.86	2.71	3.50	4.07	2.86	활력·참여·성장
D	2.89	1.32	2.46	3.43	2.54	2.46	문화·복지
E	3.11	1.64	3.25	3.25	3.25	2.71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F	4.46	2.25	3.61	4.00	3.57	3.39	일자리·창업
G	2.71	2.39	2.29	4.36	3.18	2.46	문화·복지
H	4.11	1.93	2.36	3.89	3.18	2.82	일자리·창업

한편 ‘청년정책 F사업’의 경우 원래 분류되어 있는 일자리·창업 영역 이외에 문화·복지영역 정책으로의 효과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 사업평가

다음 〈표 5-41〉은 청년정책 사업평가 부분의 각 세부 지표별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F사업’이 자료의 충실성과 계획수립 및 이행, 성과지표 적절성 목표 달성의 4가지 지표에서 각각 6.36, 6.21, 5.82, 5.75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후 ‘청년정책 B사업’ (6.14, 6.11, 5.54, 5.6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청년정책 D사업’의 경우 앞선 4가지 영역에서 각각 3.43, 4.0, 3.64, 3.64를 기록하여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 5-41〉 세부 지표별 사업평가 결과

순위	자료의 충실성		계획수립 및 이행		성과지표 적절성		목표 달성		개선 필요성	
	정책	평균	정책	평균	정책	평균	정책	평균	정책	평균
1	F	6.36	F	6.21	F	5.82	F	5.75	H	4.39
2	B	6.14	B	6.11	B	5.54	B	5.68	F	3.64
3	C	5.64	H	5.39	H	5.21	H	5.54	B	3.61
4	A	5.25	A	5.32	C	4.79	C	5.11	G	3.46
5	H	5.18	C	5.25	E	4.11	G	4.5	E	3.25
6	E	3.96	E	4.54	A	4.00	A	4.46	D	3.04
7	G	3.89	G	4.36	G	4.00	E	4.11	C	2.96
8	D	3.43	D	4.00	D	3.64	D	3.64	A	2.57

한편, 정책 사업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은 ‘청년정책 A사업’(2.57) 사업이었으며, 이후 ‘청년정책 C사업’(2.96), ‘청년정책 D사업’(3.04) 순 이었다. 반면, ‘청년정책 H사업’(4.39)이나 ‘청년정책 F사업’(3.64), ‘청년정책 B사업’(3.61)의 경우에는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3) 종합평가

다음 <표 5-42>는 청년정책 종합평가 부분의 각 세부 지표별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책 필요성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F사업’의 필요성이 6.36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후 ‘청년정책 B사업’이 6.29, ‘청년정책 H사업’ 5.89 순이었다. 성과지표의 적절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청년정책 H사업’(5.71)이었으며, 이후 ‘청년정책 B사업’(5.46), ‘청년정책 F사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과 목표 달성의 경우에는 ‘청년정책 B사업’이 각각 6.07과 6.18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청년정책 F사업’(5.89, 6.11), ‘청년정책 B사업’(5.71, 6.04) 순이었다.

반면, ‘청년정책 D사업’ 사업과 ‘청년정책 A사업’, ‘청년정책 E사업’ 사업의 경우에는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 성과지표 적절성, 목표달성의 4가지 지표 모두에서 타 사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 5-42〉 세부 지표별 종합평가 결과

순위	필요성		효과성		성과지표 적절성		목표 달성	
	정책	평균	정책	평균	정책	평균	정책	평균
1	F	6.36	B	6.07	H	5.71	B	6.18
2	B	6.29	F	5.89	B	5.46	F	6.11
3	H	5.89	H	5.71	F	5.46	H	6.04
4	C	5.57	C	5.39	G	4.61	C	5.64
5	G	5.43	G	5.18	C	4.36	G	5.39
6	E	4.54	E	4.32	E	3.96	E	4.46
7	A	4.43	A	4.14	A	3.75	A	4.11
8	D	4.21	D	3.96	D	3.36	D	4.00

3. 시범평가 심층분석

1) 청년 당사자와 비청년 집단 비교

이번 절에서는 평가자의 청년당사자 여부를 비롯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비전문가, 부산지역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5-43>는 청년 당사자 여부를 기준으로 청년정책 평가결과와 응답 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5-43〉 청년 및 비청년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정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집단 간 차이
A	청년	18	63.4	15.9	-.033	
	비청년	10	63.6	16.6		
B	청년	18	84.4	10.0	.247	
	비청년	10	83.5	7.2		
C	청년	18	74.8	17.4	-.046	
	비청년	10	74.5	10.1		
D	청년	18	61.3	19.3	1.296	
	비청년	10	51.6	18.2		
E	청년	18	66.3	19.8	1.057	
	비청년	10	58.5	16.6		
F	청년	18	85.0	12.1	.375	
	비청년	10	83.4	7.8		
G	청년	18	70.6	12.6	.114	
	비청년	10	70.1	8.7		
H	청년	18	85.3	10.3	2.594 *	청년 > 비청년
	비청년	10	74.5	11.0		

주: * $p < .05$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A사업’과 ‘청년정책 C사업’을 제외한 다른 6개 사업의 평가에서는 대부분 청년 당사자가 비청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청년정책 H사업’의 경우 청년 집단이 비청년 집단에 비해 약 10.8점 정도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2) 전문가와 일반인 비교

다음의 <표 5-44>은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을 기준으로 청년정책 평가결과의 응답 결과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A사업’과 ‘청년정책 F사업’의 경우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 평가에 비해 높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6개 사업의 평가에서는 대부분 일반인의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평가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청년정책 H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 약 14.3점 정도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정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집단 간 차이
A	전문가	15	66.7	15.8	1.156	
	일반인	13	59.8	15.7		
B	전문가	15	82.0	9.0	-1.331	
	일반인	13	86.5	8.7		
C	전문가	15	74.1	10.7	-.228	
	일반인	13	75.4	19.3		
D	전문가	15	53.5	17.7	-1.308	
	일반인	13	62.8	20.3		
E	전문가	15	61.6	16.5	-.577	
	일반인	13	65.8	21.7		
F	전문가	15	85.9	7.5	.761	
	일반인	13	82.7	13.6		
G	전문가	15	69.7	8.0	-.348	
	일반인	13	71.2	14.3		
H	전문가	15	74.8	10.2	-4.084 ***	일반인 > 전문가
	일반인	13	89.1	7.9		

주: *** p < .001

3) 부산지역 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 비교

다음의 <표 5-45>는 부산지역 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의 청년정책 평가결과의 응답 결과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C사업’과 ‘청년정책 E사업’, ‘청년정책 F사업’, ‘청년정책 G사업’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의 평가 결과가 약간 높았으며, ‘청년정책 B사업’과 ‘청년정책 D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지역 거주자의 평가결과가 다소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청년정책 A사업’사업의 경우에는 타지역 거주자 집단이 부산지역 거주자 집단에 비해 약 16.7점 정도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부산지역 거주자 및 타지역 거주자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정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집단 간 차이
A	부산지역	21	59.3	14.4	-2.680 *	타지역 > 부산지역
	타지역	7	76.0	13.8		
B	부산지역	21	85.2	7.2	1.150	
	타지역	7	80.7	13.2		
C	부산지역	21	74.1	16.4	-.322	
	타지역	7	76.3	10.8		
D	부산지역	21	58.4	18.8	.285	
	타지역	7	56.0	21.6		
E	부산지역	21	62.8	20.4	-.371	
	타지역	7	65.9	14.2		
F	부산지역	21	83.9	11.2	-.484	
	타지역	7	86.1	9.3		
G	부산지역	21	83.9	11.2	.154	
	타지역	7	86.1	9.3		
H	부산지역	21	81.4	12.8	-.037	
	타지역	7	81.6	8.0		

주: * $p < .05$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 정책평가의 특성

정책평가란 정책이 처음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분석 및 점검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이라는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평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평가단을 구성하고 보다 타당한 방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환류체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정책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방법의 적실성이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 방법은 분석자료의 특성에 따라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구분이 가능하거나 평가설계의 유무에 따라 실험설계 접근법과 비실험설계 접근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각의 정책평가방법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현실세계에서의 적용가능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평가가 갖추어야 할 기준의 경우 연구자들마다 제안하는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평가 방안에서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같은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목표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정책의 형평성은 핵심적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자들의 경우 정책의 형평성과 대응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경향성이 관찰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는 사항은 평가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여부이다.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여건들이 충족됨에 따라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시민이 정책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청년의 참여 및 주도성이 강조되는 청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 평가 과정에서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요 정책평가 사례분석

이번연구에서는 청년정책 평가지표 및 체계 분석에 앞서 주요 인구 및 사회복지, 아동영역에서의 정책평가 사례를 탐색하였다.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중앙과 지자체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중앙의 인구정책 평가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초하여 인구정책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역시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부산연구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청년정책의 많은 영역이 청년복지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아동영향평가는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평가라는 점에서 각각의 시사점을 지닌다. 다만, 평가체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이 보장·강조되는 지역 청년정책 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책 사례별 평가지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정책의 경우 개별 정책사업이 인구정책으로 적절한지 살펴보면 ‘정책 부합성’과 정책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인 ‘실행전략 적절성’, 결과에 대한 평가인 ‘정책 효과성’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지표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 및 만족,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동정책영향평가의 경우 ‘아동 관점 반영’이라는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앞선 두 사례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여기서 아동관점이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비차별 원칙, 아동의견 존중 등 세대정책으로서 갖추어야 할 목표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3)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분석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책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짐에 따라 더욱

많은 정책 대상들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연구에서는 청년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여섯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인지적 관점의 평가지표 구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성격의 평가지표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참여와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정책의 효과성 중심의 평가를 통해 청년의 삶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청년 간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의 요구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적이며 지속가능한 평가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평가 역시 이와 같은 대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정책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종합평가 및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위탁형 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초기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으나 2024년부터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로 전환되었다. 한편, 광역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자체의 대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위지자체 중심의 순위 공개를 통해 우수 청년정책사례를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정책 심층평가의 경우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예산 규모, 파급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사업을 결정한 뒤, 각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심층평가는 보다 면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점에서 종합평과와 차별성을 지닌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청년센터의 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전달체계에서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광역청년센터는 기초지역의 청년센터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일반적 청년센터 사업 평가업무 이외에 ‘서울청년수당’과 같은 서울시 핵심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효과성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책평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및 평가체계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4년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청년정책 평가는 예산규모와 집행률, 그리고 간략한 사업별 추진실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체계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정책평가의 환류체계 구성이 미흡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4)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도출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제시하였다. 1차 자문에서는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지표 구성을 위한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2차 및 3차 자문에서는 1차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안된 평가지표는 ‘사업영역 평가’와 ‘청년정책 사업평가’, ‘종합평가’의 3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업영역 평가는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청년 생활인구’의 6대 분야와 해당 정책사업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 사업영역 평가 문항은 각 사업들이 부산시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의 부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각 영역별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정책 사업평가는 ‘자료의 충실성’과 ‘계획수립 및 이행’,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 ‘개선 필요성’의 5개 정량지표와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평가는 청년정책으로 해당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효율성’, ‘지속 필요성’의 4개 정량지표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 할 수 있는 정성평가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의 정량평가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자는 이전연도에 수행된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구성된 문항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각 정책평가 결과는 사업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정책평가 결과는 청년정책 사업평가 40점, 종합평가 60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청년정책 사업평가의 경우 각 문항의 응답 값을 합산한 뒤, 이후 기본점수 5점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된다. 한편, 종합평가의 경우 각 문항의 응답 값에 두 배를 곱하여 합산한 뒤, 이후 기본점수 4점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5) 청년정책 시범평가의 한계 및 시사점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8개 정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다. 시범평가에는 부산시 청년산학국이 제공한 복지·문화 영역의 4개 사업과 일자리 영역 2개 사업, 참여·권리 영역과 교육 영역에서 각각 1개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정책평가에는 28명의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였다. 청년정책 전문가는 주요 영역별 학계 전문가와 및 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청년 당사자의 경우 정책영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 이외에도 청년활동과 관련이 낮은 일반 청년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이번 청년정책평가는 평가를 위한 사업담당자의 평가서 없이 사업 결과보고서만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보다 엄밀한 청년정책 평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사업담당자의 보고서 제출 및 관련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지표 안을 바탕으로 부산시에서 청년정책 평가를 진행할 경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상에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평가에서는 청년산학국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청년정책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책 평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의 목표 및 비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평가의 목적 및 활용방안 역시 사회적 수요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중앙단위의 청년정책 평가 역시 지난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역시 추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 수행 및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보완이 중요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청년기본법」 제정보다 3년 앞선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행정기관 보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구성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절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청년정책 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화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정책 평가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 지표이 외에도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분석 및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청년정책 성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 결과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는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부산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체 평가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자체평가는 청년정책 평가 과정에서 청년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평가의 전문성 역시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판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평가를 통해 도출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전파 및 포상 방안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평가의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사업수행기관 및 광역지자체 단위의 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며,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 전파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역시 환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수 정책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청년정책 심층평가 도입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 방안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종합평가와 유사한 형태 및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한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이외에 핵심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책 심층평가는 부산시 대표 청년정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성 및 예산 효율성을 측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와 정책 실무자 및 정책 수혜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적 평가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핵심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 효과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가 효과를 파악하고, 각 효과가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심층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이외에도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유사 정책의 통합과 같은 정책 재구조화, 예산과 관련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정책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가를 통해 지역 청년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부산시 청년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 평가체계의 마련 이외에 전달체계의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부산광역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부산시 청년정책은 양적 확대를 이룩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질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한 정책전달체계에 대한 고도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정책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여 자원 및 재원의 낭비를 막고, 정책 사각지대에 골고루 지원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변금선 외, 2023). 부산시 역시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평가체계 구축이 함께,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을 정리하고, 보다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4)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평가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 평가지표와 시범평가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부산 지역의 청년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위치하면서 매개체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청년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기초지자체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매개자로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정의 일환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지역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더욱 이바지 할 것이다.

Abstract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Busan's Youth Policy Evaluation Index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robust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propose comprehensive evaluation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which have seen significant expans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Basic Youth Ordinan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Current evaluation practices primarily rely on self-assessment centered on budget execution rates and the achievement of individual project objectives, lacking a systematic evaluation index and feedback mechanism. To address this gap, this research endeavors to 1) develop an evaluation system and index that are reflective of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Busan's youth policies, drawing upon theoretical frameworks and analyses of pertinent case studies in policy evaluation, and 2) validate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through a pilot evalu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key phases. First, an evaluation index for assessing Busan's youth policies was developed through a thorough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n policy evaluation and youth policy, complemented by expert consultations. The developed index encompasses project category evaluation, specific youth policy project evaluation, and a comprehensive overall evaluation, designed to facilitate multifaceted assessment incorpora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Second, the developed evaluation index was applied in a pilot evaluation of eight projects selected from the 2023 Busan Youth Policy Implementation Plan. A total of 28 participants, comprising youth policy experts and the youth policy beneficiaries themselves, were involved in the assessment process, with deliberate efforts made to ensure both objectivity

and representativeness.

The results of the pilot evaluation affirmed the utility of the developed evaluation index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Busan's youth policy projects. However, the evaluation also revealed certain limitations, including the selective nature of the projects under evaluation, a scarcity of comprehensive evaluation data, and some constraints within the evaluation process itself.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expanding the scope of evaluation to encompass the diversity of youth policies and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data for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to ensure objective and reliable evaluation outcomes, the establishment of an external evaluation body and the implementation of transparent evaluation procedures are crucial. Second, given the heterogeneity of youth policies, the scope of evaluation must be broadened to include all relevant projects. Third, continuous refinement of the evaluation index through ongoing evaluation and the integr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to a systematic policy feedback loop are necessary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provide a foundation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youth policy evaluation system in Busan an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youth policies in the region.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addressing the identified limitations by expanding the scope of evaluation, developing robust data collection strategies, and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diverse evaluation methodologies to further enhanc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ssessment process.

참고문헌

1. 논문 및 도서, 정책연구 보고서

- 고숙자·안영·김수진·전진아·윤강재·황남희·이상정·여유진·이아영·박소은·나원희·강지원·이영숙.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현. 2017.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문길. 2022. “청년정책 패키지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314, 74-95.
- 김문길·오선정·김형주·류승한·서복경·김태완·김성아·곽윤경·정세정·박미선·김유빈·김세움·김주영·남재욱·김기현·배정희·신선미·기현주·남기찬·조성철·박진한·오상봉·정현미·윤태영·조형근·박수민·류기락·이지혜·강예은.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욱·김형균·김도관·박경옥. 2018.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연구원.
- 김종호. 2016.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제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205-222.
- 김주환. 2003.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평가방법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9-326.
- 김지원. 2019. 「정책평가론」, Know Press.
- 남궁근. 2019. 「정책학」, 법문사.
- 노유진. 2005. “우리나라 정부부처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의 저활용 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노화준. 2018. 「정책평가론」, 법문사.
- 민희·이원익·도묘연·김태완·이고은·곽동진. 2023.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경옥·김종욱·김미영. 2019. 「부산청년정책 비전」, 부산연구원.
- 배정희·김기현.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금선·이영주·김기현·장익현. 2023.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정책영향평가매뉴얼」.
- 부산연구원. 2023. 「2023년도 인구영향평가 평가결과(기존사업)」.
- 서울광역시청년센터. 2024. 「202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차보고서」.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2.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 보고서」.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3.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 및 추적조사」.
- 송희준·이근주·이명석. 2005.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

- 이근주. 2018.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참여 확대에 대한 시론적 논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341-362.
- 이봉락·강근복. 2009.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활용의 영향요인 분석-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3(3), 45-80.
- 이석환. 2018.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 (Citizen-focused Policy Evaluation): 시민의 다각적 역할에 대한 소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317-340.
- 이아영. 2022. 「청년정책 심층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식. 2000.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의 정보화평가를 기초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183-203.
- 이윤식. 2006.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1-33.
- 이윤식. 2018.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 정주택·김종래·김종호·문영세·이대희·이성우·조연숙·최영훈. 2007. 「정책평가론」, 법문사.
- 조경욱·전희진·최지훈·전아람. 2023.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조성은·김예슬·노현주·강지원·김기태·신영규·임덕영·정세정·이혜빈·배정희·곽윤경. 2022. 「청년정책 일반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 「5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 설명 자료집」.
- 최영출. 2011. “논리모형(Logic Model)의 성과관리 적용 가능성: 사회적 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13-38.
- Bickman, L. 1987. The functions of program theory. New directions for program evaluation, 1987(33), 5-18.
- Dunn, W. N. 2015. Public Policy Analysis. Routledge.
- Epstein, P. D., Coates, P. M., Wray, L. D., & Swain, D. 2006. Results that matter: Improving communities by engaging citizens, measuring performance, and getting things done. John Wiley & Sons.
- European Commission. 2021.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 Leviton, L. C., & Hughes, E. F. 1981.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s: A review and synthesis. Evaluation review, 5(4), 525-548.
- Mohr, L. B. 1995. Impact analysis for program evaluation. Sage.
- Nakamura, R. T., &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St. Martin's Press.
- Suchman, E. A. 1967. Evaluative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 in Public Service and Social Action Programs. Russell Sage Foundation.
- Vedung, E. 2017.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Routledge.

2. 정부실행계획 및 관련 자료

- 국무조정실. 2022.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국무조정실. 2023. 「2024년(2023년도 실적) 청년정책 평가계획(안)」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
- 부산경제진흥원. 2024a. 「2023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결과보고」
- 부산경제진흥원. 2024b. 「2023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 카드+) 지원사업 결과보고」
- 부산광역시. 2018.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 부산광역시. 2023a. 「2023 부산청년주간 운영 결과보고」
- 부산광역시. 2023b.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2023c. 「2023년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지원사업 품평회 결과보고」
- 부산광역시. 2023d. 「청년문화 대표 콘텐츠 ‘스트릿댄스’ 활용한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축제 2023년 부산 댄스 페스티벌 개최 결과 보고」
- 부산광역시. 2024a. 「2023년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실적 및 정산보고」
- 부산광역시. 2024b. 「2023년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 정산보고」
- 부산광역시. 2024c. 「2024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2024d. 「부산광역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3.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청년기본법」

4. 조례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5.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3년도 청년정책 우수기관 발표”, 2024.06.2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 2024.04.26.

6. 인터넷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 (검색일: 2024.10.08)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https://www.busanjob.net/08_wyou/wyou08.asp (검색일: 2024.09.23.)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 홈페이지 <https://child.ncrc.or.kr/> (검색일: 2024.10.11.)

조은주. 형성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희망제작소(작성일: 2021.09.02)

창의연구 2025-04-249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저	자	김세현, 손현일, 장지현, 김민경, 서옥순, 이가현
발	행	인 신현석
발	행	일 2025년 04월
발	행	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600, FAX (051)860-8619
		홈페이지 http://www.bdi.re.kr

I S B N 979-11-6886-249-4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